

최종보고서

【연구과제명 : 대한민국 유권자 정당 인식조사】

2021. 12. 24.

장한일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하상응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용호 (서울대학교 아세아연구소)

제 출 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하

본 보고서를 『대한민국 유권자 정당 인식조사』
의 최종 결과물로 제출합니다.

2021년 12월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 오 하 령

목차

I. 연구의 목적과 배경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배경: 정당일체감과 한국 정당정치 현실	3
1) 한국인의 정당 개념의 다양성	3
2) 한국의 당파적 양극화와 정책선거	5
II. 기존연구 검토	8
1. 정당일체감에 대한 이론	8
2. 유권자의 정당 이념 인식	13
III. 한국 유권자의 정당일체감	19
1. 정서적 당파심: 당파적 정체성	19
2. 도구적 당파심: 이념성향과 정책선호	27
3. 정서적 당파심 vs 도구적 당파심: 통계분석	30
4. 정서적 당파심의 중요성: 집단별 분석	35
5. 소결	39
IV. 한국 유권자의 정당 이념 인식	41
1. 정당 이념 위치 인식	42
2. 정당의 현안 입장 인식	48
3. 정당 이념 위치 인식의 결정 요인: 회귀분석	56
4. 소결	62
V. 결론: 총정리와 정책선거 추진 방향	64
1. 설문조사 분석 결과 총정리	64
1) 한국 유권자의 정당일체감	64
2) 한국 유권자의 정당 이념 인식	66
2. 정책선거 추진 방향	68
참고문헌	73

표 목차

<표3-1> 당파적 정체성: 문항별 분포	20
<표3-2> 핵심 독립변수의 기술통계량	31
<표3-3> 정당일체감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ordered logit 모형 ..	32
<표3-4> 정당일체감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통제변수 포함	34
<표3-5> 정당일체감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지지 정당과의 상호작용 .	36
<표3-6> 정당일체감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령과의 상호작용	36
<표3-7> 정당일체감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거주 지역과의 상호작용 .	37
<표3-8> 정당일체감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치지식과의 상호작용 ..	38
<표3-9> 정당일체감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념성향과의 상호작용 ..	39
<표 4-1> 정당의 현안 입장 인식	50
<표 4-2> 정당 이념 위치 인식	57
<표 4-3> 정당과의 이념 일치 정도	58
<표 4-4> 정당의 현안 입장 인식	60
<표 4-5> 정당과의 현안에 대한 입장 일치 정도	61

그림 목차

<그림3-1> 당파적 정체성, 전체 응답자	21
<그림3-2> 당파적 정체성, 연령별	22
<그림3-3> 당파적 정체성, 성별/연령별	23
<그림3-4> 당파적 정체성, 지역별	24
<그림3-5> 당파적 정체성, 정당일체감별	24
<그림3-6> 당파적 정체성, 이념성향별	25
<그림3-7> 당파적 정체성, 정치관심도별	26
<그림3-8> 당파적 정체성, 정치지식 수준별	26
<그림3-9> 지지 정당과의 이념적 거리 (%)	28
<그림3-10> 지지 정당과의 정책선호 차이 (%)	29
<그림3-11> 정당일체감의 강도 (%)	31
<그림3-12> 강한 정당일체감 강도의 확률 변화	33
<그림3-13> 약한 정당일체감 강도의 확률 변화	33
<그림 4-1> 정당 이념 위치 인식 (%)	43
<그림 4-2> 응답자 본인과 정당 간의 이념 거리 인식 (%)	44
<그림 4-3> 정당과의 이념 일치 정도(%)	46
<그림 4-4> 정당과의 이념 일치 정도: 세대 및 성별 기준 (%)	48
<그림 4-5> 정당의 현안 입장 인식	52
<그림 4-6> 정당과의 현안에 대한 입장 일치 정도	54
<그림 4-7> 정당과의 현안에 대한 입장 일치 정도: 세대 및 성별 기준	55

I. 연구의 목적과 배경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유권자의 정당에 대한 인식, 태도, 평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국 유권자의 정당일체감(party identification)과 정당 이념에 대한 인식 등을 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을 얻고자 한다. 첫째, 한국 유권자의 정당일체감의 성격이 무엇인가? 1960년에 미국 미시간 학파가 정당일체감을 “특정 정당에 대한 안정적인 심리적 애착심”으로 개념화한 이후,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관련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최근 정치학자들은 유권자가 정당에 대해 가지는 태도를 도구적 당파심(instrumental partisanship)과 정서적 당파심(expressive partisanship)으로 구별하고 있다. 전자는 특정 정당의 과거 국정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의 총합으로 본다. 그러나 후자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합리적인 계산이 아니라 유권자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에 뿌리 내린 사회심리적 정서적 태도라고 본다. 이 연구는 한국 유권자들이 도구적 당파심이 강한지, 정서적 당파심이 강한지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한국 유권자의 정당일체감이 안정적인가, 불안정한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한다. 민주화 이후 한국 정당정치의 안정화 여부에 대한 평가는 학자들마다 다르다. 일부 학자들은 정당의 잦은 이합집산과 당명 변경으로 인해 정당정치가 불안정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부 학자들은 개별정당의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정당구도가 지속되고 있고, 유권자의 지역투표가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정당정치가 안정적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처럼 대조적인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전자가 정당조직의 불연속성을 강조한 반면 후자는 지역정당 경쟁구도의 지속성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 유권자의 정당일체감이 얼마나 안정정인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해 보면 한국 정당정치의 안정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한국 유권자들은 현행 주요 정당의 이념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대체로 한국정당은 2000년대 들어 과거의 보수 일색의 국민정당 내지 포괄정당

(catch-all party)의 성격에서 벗어나 이념적 분화가 진행되었다. 그리하여 선거나 정당정치에서 보수 정당-진보 정당간의 이념 갈등이 심화되었다. 그런데 한국 유권자들은 과연 주요 정당이 표방하는 이념적 좌표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세대에 따라 정당의 이념 성향에 대한 평가가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한국정치의 이념 지형을 전망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 연구는 위에서 열거한 주로 2가지 주요 사항(유권자의 정당일체감과 정당 이념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 유권자의 정당 인식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는 유권자의 사회경제적 특성(거주 지역, 성별, 나이, 세대, 교육 수준, 소득 등)이 정당일체감이나 정당 이념 인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규명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학문적, 실천적 과제를 고려하였다. 첫째,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이 연구는 한국 유권자와 서구 민주주의 국가의 유권자들을 비교함으로써 정당 이론의 발전에 기여하려고 노력했다. 이미 서구의 많은 학자들이 미국과 유럽 국가의 유권자의 정당일체감, 정당 이념 인식 등을 분석한 바 있다. 이 연구를 통해 한국 유권자가 드러내는 정당일체감의 특징과 성격이 밝혀지면, 다른 나라 유권자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 정당정치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향후 발전 방향을 전망하는데 매우 유익할 것이다. 예컨대 서구 민주주의 국가를 대상으로 발전된 기존 이론에 비추어, 한국 유권자들이 정당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가 가지는 공통점과 특수성을 설명하고 이를 통해 한국 정당정치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 연구가 한국의 정당 발전과 정책 경쟁을 비롯한 선거민주주의의 질 향상에 간접적으로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정책선거를 구현하기 위해 선관위를 비롯하여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의 다양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당파적 양극화의 확대는 이러한 노력의 성과를 저해하고 있다. 그런데 정책선거의 구현은 단순히 구호와 캠페인으로 달성할 수 없으며, 궁극적으로 한국 유권자들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사고하며, 어떻게 선택을 내리는가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해야 한다. 정당에 대한 태도가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과 활동에 미치는 핵심적인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한국 유권자들이 정당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와 인식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보다 실질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한 선거문화와 정당정치를 만들어가기 위한 이론적·경험적 기반을 제공

할 것이다.

2. 연구의 배경: 정당일체감과 한국 정당정치의 현실

1) 한국인의 정당 개념의 다양성

민주화 이후 한국 정당정치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주요 쟁점의 하나가 정당 정치의 안정화 여부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안정적이라고 평가하는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불안정하다고 평가한다. “안정적”이라는 평가의 근거는 정당의 이름이 계속 바뀌지만 유권자들은 영남정당이나 호남정당에 대한 안정된 지지를 보여주고 있다. 또 당명 변경에도 불구하고 정당 조직이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 유권자들이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을 쉽게 구분함에 따라 정당의 이념적 지지기반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불안정”이라고 평가하는 근거는 무엇보다 정당의 이름이 계속 바뀌고, 정당이 이합집산을 거듭하고 있어서 정당정치의 유동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당원의 동의 없이 정당지도자가 마음대로 합당, 해산, 당명 변경 등이 가능할 정도로 한국 정당은 여전히 현대식 대중정당(mass party)이 아니라 전 근대적 엘리트 정당, 명망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2004년 총선 이후 양대 정당이 정치를 주도하는 모습이 등장했지만 아직도 양당구도(two-party format)인지, 다당구도(multi-party format)인지가 불확실하다. 민주화 이후 한국 정당정치에 대한 이러한 상반된 평가가 나오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정당 개념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안정적이라고 평가하는 학자들은 느슨한 정당 개념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고, 불안정하다고 보는 학자들은 엄격한 정당 개념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정치학자 외에 정치인과 일반 국민들의 정당에 대한 개념도 다양하다. 이번 연구가 우리 사회의 정당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제 이 연구에 도움을 얻기 위해 외국 학자들의 정당 개념에 대한 다양한 설명을 참고해 보자. 키(V.O. Key)는 정당 개념을 3가지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다. 즉 조직으로서의 정당(party as organization), 유권자 속의 정당(party in the electorate), 정부 속의 정당(party in the government)이다. 이러한

정당 개념은 주로 구조적인 측면에서 정당을 정의한 것으로 모든 나라의 정당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예를 들면 “정부 속의 정당” 개념은 한국에 적용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통치과정에서 정당의 역할이나 연속성이 매우 부족하여 예컨대 민주당 정부라는 인식보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라는 인식이 강하다. 한편 오스틴 래니(Austin Ranney)는 정당 개념은 구조 외에 기능, 행태, 행위자, 결과, 영역 등 여러 측면에서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특히 나라마다 정당 구성원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정당의 인적 구성 요소는 1) 정당 지도자(party leaders), 2) 정당 활동가(party activists), 3) 일반 당원(ordinary party members), 4) 예비선거 지지자(primary voters), 5) 일반 지지자(supporters), 6) 동조자(identifiers, sympathizers) 등이다. 그런데 유럽은 1), 2), 3)을 정당구성원으로 파악하는 반면, 미국은 적어도 1), 2), 3), 4)까지 포함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의 경우 과거 3김 시대에는 1)이 정당의 주인이고 다른 구성원은 모두 손님인 것처럼 생각했다. 그런데 3김 이후 최근 정당정치 상황은 1) 외에 다른 구성원이 과연 자신을 정당 행위자(party actor)라는 인식이 있는지 실증적으로 검증이 필요하다.

이러한 다양한 정당 개념 중에서 한국의 정당정치를 분석하는데 가장 유용한 개념은 어느 것인가? 실증적 연구에 들어가기 전에 한국 정치인들의 정당 개념을 추정하기 위한 몇 가지 사례를 분석해 보자.

첫째, 3김 시대에는 머신정당(political machine) 개념이 한국 정당을 분석하는데 가장 유용했다. 3김이 공천권, 지역 패권, 막대한 정치자금 등으로 추종자들을 거의 완벽하게 관리했다. 예를 들면 김대중 후보가 1992년 대선 패배 후 정계 은퇴를 선언했으나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하자, 당시 민주당의 현역 국회의원이 거의 모두 새정치국민회의에 합류하였다. 이 시기에 한국 정당은 최고지도자의 개인적인 정치도구에 불과했다.

둘째, 이회창이 한나라당 후보로 2차례의 대선 실패 후 2007년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나서 충청정당의 당수가 된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이런 현상은 3김 이후에도 머신정당의 요소가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 정치엘리트와 유권자들이 지도자 중심의 정당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셋째, 2008년 총선에서 “친박연대” 현상은 한국인의 정당 인식을 어떻게 파

약해야 할지 연구 과제를 던져 주었다. 박근혜 없는 박근혜 당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정당이라고 보기 힘든 정치조직이 정당투표에서 13%나 득표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넷째, 2012년 한나라당의 당명 변경에도 불구하고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한 것을 보면 한국인의 정당 개념은 불가사의(不可思議)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1회성 정치 현상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은 언제나 사라지는 현상이 예외 없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인의 이러한 정당 개념은 키(V.O.Key)를 비롯한 서구학자들의 정당 개념과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속의 정당” 개념이 희박하다. 최근 정당 대신 대선후보 캠프가 행정부 구성의 핵심 역할을 하고, 동일 정당이 계속 집권함에도 불구하고 정당 이름이 바뀌어 “정부 속의 정당”은 실질적으로 형성되지 못하는 경향이 강하다. 결국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는 있지만 새천년민주당 정부와 열린우리당 정부는 1회성으로 끝나버렸다. 이러한 정치 현상을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정당을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 및 수단,” 그리고 유권자들의 경우 “정당은 정치적 의사 표현의 상징”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 한국의 당파적 양극화와 정책선거

최근 들어 한국 사회에서 당파적 양극화(partisan polarization)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정당의 지지자에 대한 조롱과 분노를 표출하는 현상이 쉽게 관찰되고 있으며, 정책과 사안, 후보에 대한 합리적인 토론과 타협보다는 지지 정당이나 후보를 무조건적으로 찬성하는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최근 들어 지지 정당에 따른 차이와 편견이 정치적 태도에 그치지 않고 일상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 또한 제시되고 있다(장승진·장한일 2020).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유권자들이 정치적으로 양편으로 갈려서 대립하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2000년대 들어 진보-보수의 이념성향이 주요한 정치적 갈등 축으로 대두된 이래로 한국 정치엘리트 사이에서 이념적 양극화는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가상준 2016; 강우창 외 2020; 강월택

2012; 박윤희 외 2016). 그러나 이와 동시에 유권자 수준에서는 엘리트 수준의 양극화에 상응하는 이념성향 및 정책선호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윤성이 2006; 이내영 2011; 정동준 2018). 그리고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이념적 중도층, 혹은 무당파가 여전히 한국 유권자의 최대 다수 집단으로 남아 있다.

이와 같이 유권자의 성향과 선호가 특별히 더 극단적으로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반대편에 대해서 예전보다 더욱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현상은 정서적 양극화(affective polarization)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서적 양극화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보다 강한 호감을 가지게 되는 동시에 반대하는 혹은 지지하지 않는 정당에 대해서는 보다 강한 반감을 가지게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즉 무당파 유권자의 규모에는 큰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지지자들이 보다 동질적이고 일관된 정치적 성향과 선호를 획득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당파적 배열(partisan sorting)의 결과가 바로 정서적 양극화라는 것이다(Fiorina 2017; Levendusky 2009). 실제로 최근 연구를 통해 한국 유권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당파적 배열 및 정서적 양극화에 대한 증거가 제시된 바 있다(길정아·하상응 2019; 김성연 2015; 정동준 2016, 2018; Lee 2015).

그러나 한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당파적 배열을 확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당파적 배열이 정서적 양극화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분석이 이루어진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정치에서 당파적 양극화가 발생하는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한국 유권자들이 지지하는 정당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의 기원과 특성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이 요구된다고 본다. 한국 유권자의 정당일체감이 정서적 당파심과 도구적 당파심 중 어느 쪽에 상대적으로 더 가까운가에 따라서 당파적 양극화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한국 유권자들이 주요 정당의 이념적 위치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대한 분석은 보다 구체적으로 당파적 양극화를 가져오는 원인에 대한 분석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당파적 양극화와 함께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을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어떤 정당을, 어떠한 이유로

지지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지지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궁극적으로 더욱 합리적이고 정책중심의 선거문화를 만들어가는 작업에 중요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기존 연구 검토

1. 정당일체감에 대한 이론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정당에 대한 선호의 중요성은 미시간 학파(Michigan school)라고 불리는 일군의 학자들에 의해 이론적·경험적으로 확립되었다(Campbell, Gurin, and Miller 1954; Campbell et al. 1960; Converse 1964). 이전까지의 컬럼비아 학파(Columbia school)에 따르면 선거운동의 역할은—새로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치적 선택의 변화를 이끌어낸다기보다는—유권자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정치적 성향을 활성화하고 그에 기반한 선택을 오히려 강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정치적 성향은 유권자가 속한 사회경제적 집단의 특성에서 직접적으로 기인한다고 보았다(Berelson, Lazarsfeld, and McPhee 1954; Lazarsfeld, Berelson, and Gaudet 1944). 그런데 미시간 학파는 컬럼비아 학파의 주장이 지나치게 정적(static)이라고 비판하며, 유권자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유동적인 선거 결과의 사이를 매개하는 변수로서 “정당일체감(party identification)”을 제시하였다. 다시 말하면 정당일체감의 변화, 즉 유권자들 사이에서 정당에 대한 선호의 분포 변화가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선거 결과에 단기적인 변동성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미시간 학파에 따르면 정당일체감은 유권자가 특정 정당에 대해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애착심(enduring psychological attachment)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당일체감은 다분히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변수로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합리적 계산과는 거리가 멀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시간 학파의 정당일체감은 종교나 인종과 같은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social identity)의 일부라고 간주할 수 있다. 정당일체감은 유권자가 정치에 눈을 뜨기 훨씬 이전부터 부모로부터 전수받으며 이후 소속 집단의 정치적 가치와 정향, 문화를 습득하고 내면화하는 정치적 사회화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Jennings and Niemi 1981; Niemi and Jennings 1991). 일단 형성된 정당일체감은 쉽게 변화하지 않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강도가 세지며 안정적으로 공고화된다. 유권자에게 새로운 정보가 주어지는 경우에도 정보의 내용에 따라 정당일체감이 변화

하기보다는 오히려 정당일체감이 기존에 지지하는 정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보를 선택적으로 수용·해석하도록 하는 심리적 기제(perceptual screen)로서 작용한다. 결과적으로 정당일체감은 구체적인 쟁점이나 후보와 같은 다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으면서 유권자의 정치적 태도나 투표선택에 궁극적인 영향을 끼치는 “추동되지 않는 추동자(unmoved mover)”라는 것이다.

주로 1950-60년대 자료에 기반한 미시간 학파의 정당일체감 개념에 대한 비판은 이후 다양한 측면에서 제기되었다. 무엇보다도 1970년대 이후 미국 유권자 중 특정 정당에 대한 일체감을 가지고 있지 않은 무당파(independent) 유권자의 비율이 증가하는 한편 정당일체감과 실제 투표 사이의 상관관계가 이전에 비해 약화되었다(Nie, Verba, and Petrocik 1976). 또한 정당일체감이 단순히 물이념적인 정서적 애착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이념이나 중요한 쟁점에 대한 유권자의 태도와도 상당한 수준의 일관성을 나타내는 모습이 관찰되었다(Nie, Verba, and Petrocik 1976; Franklin and Jackson 1983). 이와 더불어 서로 다른 정당의 후보에게 투표하는 분할투표(split-ticket voting)의 증가나 입법부와 행정부가 각기 다른 정당에 의해 장악되는 분점정부(divided government)의 등장과 같이 전통적인 정당일체감 개념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미국 정당정치 변화와 함께 정당일체감에 대한 수정주의적(revisionist) 해석이 나타났다. 이러한 새로운 개념화에서는 정당일체감이 비록 유권자의 정치적 태도나 투표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끼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일체감 자체도 새로운 쟁점의 등장이나 경제상황의 변화, 후보자에 대한 평가와 같은 단기적인 요인에 의해 변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Fiorina 1981; Franklin and Jackson 1983; Markus and Converse 1979; Page and Jones 1979). 특히 피오리나(Fiorina 1981)는 정당일체감을 해당 정당의 과거 국정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의 총합(running tally)을 나타내는 인지적(cognitive) 측면의 태도라고 주장했다. 즉 대통령이나 집권당의 업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해당 정당에 대한 일체감이 강화되며 반면에 대통령이나 집권당의 업적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정당일체감의 약화를 경험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당일체감이 수시로 변화하는 유동적인 개념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정당일체감에 끼치는 영향은

누적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에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정당일체감은 단기적으로 상당한 안정성을 보일 수 있다(Achen 1992; Gerber and Green 1998). 중요한 점은 정당일체감이 사회적 정체성에 뿌리내린 사회심리적·정서적 태도라기보다는 현실정치, 특히 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인식에 기반한 정치적 평가(evaluation)라는 것이다.

정당일체감에 대한 수정주의적 해석이 등장한 이후 미시간 학파의 입장으로 부터의 반론이 제기되는 등(e.g., Green, Palmquist, and Schickler 2002; Miller 1991; Miller and Shanks 1996), 정당일체감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반론과 재반론은 양당제가 일찍이 정착하여 오랜 기간 동안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온 미국의 경험에 기반하고 있으며, 따라서 제도적 맥락(institutional contexts)이나 역사적 경험이 상이한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실제로 다당제를 채택하고 있는 많은 유럽 국가들의 경우, 당파심이 미국의 경우와는 상당히 다른 양태를 보인다. 예를 들어 이들 국가에서는 정당 간 경쟁구도가 사회의 균열구조(cleavage structure)와 훨씬 밀착되어 있으며, 전통적인 균열구조를 대변하는 정당일수록 유권자들이 보다 강력한 당파심을 나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시 말해서 유권자의 일차적인 일체감의 대상은 자신의 사회집단 및 계급으로서 해당 집단과 계급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당에 대한 일체감은 오히려 부차적인 것인 경우가 많다. 결과적으로 유권자들이 비슷한 이념적 지향을 가진 복수의 정당에 동시에 일체감을 느끼거나 당파심과 실제 투표선택 사이의 분석적 구분이 사실상 어렵다는 등 정당일체감에 대한 기존의 개념을 적용하기 어려운 모습들이 관찰되었다(Johnston 2006; Katz 1979; LeDuc 1981; Richardson 1991). 그리고 이와 같은 다당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통적인 의미의 정당일체감에 대한 대안으로서 “정당에 대한 (이념적) 근접성(party closeness)”으로서의 당파심 개념이 제시되었다(Barnes et al. 1988; Weisberg 1999).¹⁾ 이와 같은 개념화가 의미하는 것은 당파심을 현실적인 정당 간 경쟁구도에 근거하되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현 정

1) 실제로 대부분의 국가간 비교연구에서는 당파심을 측정하기 위해서 “어느 정당에 대해 일체감을 갖는가(identify with)”라고 묻기보다는 “특정 정당과 가깝다고 느끼는가(feel close to)”라고 묻고 있다.

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라는 차원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사회 균열구조에 기반한 이념적 근접성에 의거하여 정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당파심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은 수많은 이론적·경험적 연구를 축적하면서 크게 두 가지 이론적 입장으로 수렴해왔다(Huddy, Bankert, and Davies 2018; Huddy, Mason, and Aarøe 2015). 첫 번째는 미시간 학파로부터 내려오는 유권자들이 정당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를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정서적 당파심(expressive partisanship)으로 이해하는 입장이며, 두 번째는 정부에 대한 평가 및 이념 성향, 정책 선호 등과 같이 유권자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정당에 대한 선호에 끼치는 영향력을 강조하는 도구적 당파심(instrumental partisanship)으로 이해하는 입장이다.

정서적 당파심과 도구적 당파심은 단순히 유권자들이 정당에 대해 가지는 태도를 둘러싼 서로 다른 이해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민주주의 하에서 선거에 임하는 유권자의 모습에 다른 상반된 이해를 반영하고 있다. 도구적 당파심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는 자신의 이념성향이나 정책선호에 비추어보았을 때 가장 유사한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정치적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 흔히 이상적인 민주시민으로서의 모습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정서적 당파심을 가진 유권자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며, 그렇지 않은 정보는 무시하거나 왜곡하여 받아들이는 일종의 동기화된 사고(motivated reasoning)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당파적 양극화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을 비롯한 서구 민주주의 국가의 유권자들이 정당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와 비교해 볼 때, 한국 유권자의 당파심, 즉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혹은 선호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물론 한국 정당들의 잦은 이합집산과 당명 변경으로 인해 한국 유권자들이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정도의 당파심을 형성하기 어려웠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 유권자들의 당파심에 대한 초기의 논의는 “여야성향”이라는 형태로 제기되었다. 비록 한국 유권자들 사이에 비교적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당파적 태도가 발견되기는 하지만, 여야 간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역사성과 함께 비록 당명은 바뀌어왔지만 동일한 정치지도자가 주요 야당들을 이끌어왔던 점에서 당파심이 개별 정당에 대해서보다는 여당과 야당이라는 추상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이다(박찬욱 1993; 조중빈 1993). 여야 간의 정권교체가 발생함에 따라 여야성향이라는 개념이 적실성을 상실한 이후에는, 개별 정당의 부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당이 기반하고 있는 지역균열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한국 유권자들의 당파심을 지역균열 구조에 기초한 집합적 정체감이라는 틀에서 이해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이현출 2001). 비슷한 맥락에서 황아란(2008)은 한국 유권자들의 당파심은 지역 연고 정당에 대한 호감과 다른 정당에 대한 거부감이 상호작용한 다차원적인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여야성향이나 지역주의에 기반한 당파심이 비록 미국과는 전혀 다른 맥락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사회심리적·정서적 차원에서 유권자들이 정당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라는 점에서 전통적인 정당일체감 개념과 일정한 유사성을 가진다면,²⁾ 한국 유권자들의 당파심을 수정주의 이론과 유사한 형태로 파악하는 연구들 또한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김영태(2005)와 조성대·한귀영(2010)은 노무현 정부 시절 경제전망에 대한 평가와 대통령 지지율이 정당지지율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즉 경제전망에 대한 기대가 상승할수록,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할수록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하는 반면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율은 하락하였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내영·정한울(2007)은 정당 지지 및 철회에 유권자들의 쟁점에 대한 태도가 영향력을 끼쳤으며, 특히 각 정당의 이념적 위치를 구분해주는 위치 쟁점(position issues)보다는 경제적 실적에 대한 평가처럼 이념적 위치와 무관하게 유권자의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실적 쟁점(performance issues)이 더욱 중요한 변수라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한국 유권자의 당파심을 일상적인 정당 지지보다는 선거에서 나타나는 정당투표에 초점을 맞추어 이념적 차원에서 바라보는 연구들 또한 찾아볼 수 있다. 많은 연구들이 2000년대 이후 선거에서 기존의 지역균열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동시에 이념 및 세대에 기반한 새로운 균열이 중요하게 부각되었으며 실제로 유권자의 진보-보수 이념이 누구에게 투표하는가에 중요한

2) 이현출(2001)의 경우 여야성향 대신에 정당일체감 개념을 도입하되 정당에 대한 평가적 관점을 강조하는 수정주의적 해석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p. 157).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그의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무당파층의 행태를 설명하기 위한 목적에 국한된 것으로 보이며, 특정 정당에 대해 당파심을 보이는 유권자들의 경우에는 지역주의와 같은 사회심리적 측면을 여전히 중요시하고 있다.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강원택 2003, 2010; 이갑윤·이현우 2008; 최준영·조진만 2005; Jhee 2006). 특히 이지호(2009)는 민주화 이후 정당이 진보-보수의 차원에서 서로를 주요하게 차별화해 왔으며, 진보-보수 척도에 따른 정당의 위치는 그들 정당을 지지한 유권자 집단의 이념 분포와 방향에 있어서 일치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투표와 이념 사이의 밀접한 관계와는 별개로 이념적 근접성으로 인해 특정 후보나 정당을 선택하기보다는 오히려 선택했기 때문에 해당 정당이나 후보를 이념적으로 가깝게 여기게 되는 합리화 혹은 투사(projection)의 과정이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념 투표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이내영·허석재 2010).

물론 정당에 대한 태도는 위에서 설명한 이론 중 어느 하나만으로 설명하기 힘든 복잡적이고 다차원적인 개념이며, 한국 유권자들 또한 이 점에 있어서 예외는 아닐 것이다. 따라서 한국 유권자의 당파심을 다루고 있는 기존 연구들이 보여주는 다양한 분석과 주장은 당파심의 측면 중 특정한 부분을 보다 부각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본격적인 분석의 대상이 되지 못한 것은 정당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들을 하나의 틀에서 비교·평가함으로써, 과연 한국 유권자들이 주요 정당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가 정서적 당파심과 도구적 당파심 중 어느 쪽의 특성을 보다 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한국 유권자들이 드러내는 당파심의 기원과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이론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2. 유권자의 정당 이념 인식

양당체제를 갖추고 있는 국가들을 보면, 각각의 거대 정당이 보수 및 진보 이념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인다. 정당의 정강, 그리고 선거 때 정당이 내세우는 후보의 공약을 통해 정당의 이념 위치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유권자들이 주관적으로 파악하는 정당의 이념 위치가 객관적으로 측정된 정당의 이념 위치와 일치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실제 양대 정당 간 이념 거리가 가깝더라도, 유권자들이 멀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러한 인식 차이를 일으키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

으나, 가장 영향력이 큰 요인으로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정당 간, 유권자 집단 간의 이념 양극화(ideological polarization)를 들 수 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은 양극화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불과 3~40여년 전만 해도 민주주의 국가의 정당들 간의 정강과 이념, 그들이 제안하는 정책 간의 차별성이 없다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유권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결정과정에서 제대로 반영하는 책임 정당(responsible party)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학계를 지배했었다(Fiorina 1980). 하지만 이후 경제 불평등 심화, 이민자들의 유입, 미디어 환경의 급작스러운 변화들이 맞물려, 지금의 정당들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서로 다른 모습을 띠고 있고, 따라서 정당들 간의 합의와 타협의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이러한 상황 변화를 반영하듯, 최근 정당 관련 연구에서는 책임 정당 논의가 사라지고, 양극화 현상의 진단과 처방이 주를 이루고 있다(Theriault 2008).

정당 정치의 변화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연구들은 미국에서 축적되어 왔다. 18세기 말부터 거의 모든 의회 내의 표결을 호명투표(roll-call vote)에 부쳐 기록을 남기는 관행의 도움을 받아 매 회기마다 모든 상하원의원들이 어떠한 이념 성향을 보이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의원들의 투표 행태를 시계열적으로 파악한 여러 연구들은 2000년대 들어오면서 미국 양대 정당 소속 의원들의 이념이 갈수록 양극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에는 가장 보수적인 투표 행태를 보이는 민주당 의원이 가장 진보적인 투표행태를 보이는 공화당 의원보다 더 이념적으로 보수적이었지만, 지금은 가장 보수적인 투표행태를 보이는 민주당 의원이 가장 진보적인 투표행태를 보이는 공화당 의원보다 더 이념적으로 진보적인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의회 내의 양대 정당 간, 이념 성향이 겹치는 부분이 사라짐에 따라 의정활동은 과거보다 더욱 빈번히 교착상태에 빠지게 된다.

미국의 의원들 차원에서 이념 양극화가 존재한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별로 없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미국 유권자들 차원에서도 이념 양극화가 진행 중인지에 대해서는 첨예한 논쟁이 벌어져 왔다. 일부의 학자들은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유권자들 역시 과거에 비해 지금 이념적으로 양극화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논리에 따르면 과거에 진보/보수 성향을 띠었던 유권자들이 지금 더욱 더 진보/보수적으로 변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중도 성향을 띠었던 유권자

들이 진보 혹은 보수 성향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의회 차원에서 보이는 이념 양극화를 유권자 수준에서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이념 양극화와 구분되는 “정파적 배열(partisan sorting)”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미국 유권자 차원의 이념 지형 변화를 설명한다(Levendusky 2009; Mason 2015). 이 주장에 따르면 유권자들이 이념적으로 양극화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일부 진보적인 유권자들이 공화당을 지지하고, 일부 보수적인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던 현상이 사라진 것이 양극화로 잘못 인식되고 있다고 한다. 즉, 과거에 비해 지금의 미국 유권자들은 자신의 이념 성향을 잘 대변해 주는 정당을 보다 더 정확하게 선택하고 있을 뿐이지, 유권자들이 더 진보 혹은 보수 방향으로 이동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이렇듯 유권자 수준에서 이념 양극화가 존재하느냐의 여부는 여전히 합의 없이 진행 중인 논쟁이다(Abramowitz and Saunders 2008; Fiorina et al. 2008). 이 논쟁은 주요 정당들의 이념 위치와 그리고 유권자의 이념 위치 간의 거리가 과거에 비해 지금 어떻게 다른지를 해석하는 차이에서 비롯된다. 최근 일부 학자들은 이념 거리(ideological distance)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양극화를 이해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유권자들이 각 정당에 대해 느끼는 감정의 차이에 주목한다. 미국에서 많은 정치 관련 설문문에 포함되어 있는 정당에 대한 감정온도계(feeling thermometer) 점수를 통시적으로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과거에 비해 지금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대한 호감도와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정당에 대한 호감도 간의 차이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해, 현재 유권자들은 지지 정당을 상대적으로 더 좋아하고, 상대 정당을 상대적으로 더 싫어하고 있다는 말이다. 학자들은 이 현상을 “정서 양극화(affective polarization)”라고 지칭하고, 유권자 차원의 변화를 이념 양극화보다 더 잘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Iyengar et al. 2019; Webster and Abramowitz 2017).

정당 관련 이념 양극화와 정서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상은 유권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방해가 된다. 합리적인 유권자는 정치의 장에서 중요시되는 현안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갖고 있고, 그에 기반하여 자신의 명확한 입장을 형성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합리적인 유권자는 정당과 후보들의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정강 혹은 공약을 통해 정확하게 파악할 것이라 기대된다. 현안의

수가 많기 때문에 유권자는 자신의 현안에 대한 입장과 정당의 현안에 대한 입장을 각각 종합하여 이념 위치를 정할 수 있다. 현안에 대한 태도에 기반한 자신의 이념 위치와 정당/후보의 이념 위치를 비교하여, 자신의 위치와 가장 가깝게 위치한 정당/후보를 선택한다면 합리적 유권자의 정의에 부합하는 행동이라 볼 수 있다.

정치 이념이란 일반인이 정치를 보는 시각, 즉 정치 현안을 이해하고 정당과 정치인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심리적 경향성을 의미한다. 일반인의 정치 성향이 보수와 진보로 나뉜다는 것은 역사와 문화의 차이와 상관없이 경험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이다. 1950~1960년대에 정치 행태 분야를 이끌었던 구미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정치 이념은 여러 가지 정치 현안에 대한 태도의 합과 일치해야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본인의 정치 이념과 몇 가지 현안에 대한 태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면(예를 들어, 보수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동성 결혼을 지지한다든지, 진보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이민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에 반대한다든지), 그 사람은 정치적으로 “덜 세련된” 사람으로 치부되어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방해가 된다고 여겨졌다.

하지만 정치 심리학계에서는 정치 이념과 현안에 대한 태도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정치 이념을 1차원적인 스펙트럼으로 보지 않고, “경제 현안” 관련 이념과 “사회 현안” 관련 이념, 이렇게 2차원적인 스펙트럼으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한다(Feldman and Johnston 2014). 이때 경제 현안은 세금, 최저 임금, 은행·재벌 규제 등 국가가 기업과 개인의 경제 활동에 개입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은지를 따지는 영역이다(시장개입주의 대 자유주의). 사회 현안은 낙태, 동성 결혼, 양심적 병역 거부 등 사회 관행을 지키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사회 관행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선택이 존중되어야 하는지를 따지는 영역이다(사회 규범 대 개인의 자유). 이렇게 정치 현안을 2차원으로 파악하면 사람들을 정치 이념에 따라 네 가지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진성 진보: 경제 현안과 사회 현안에 대해 모두 진보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 이 부류에 속하는 사람은 정부의 시장 개입에 찬성하고(대기업 규제, 최저 임금 인상), 개인의 권리 보장에 적극적이다(동성 결혼 찬성, 낙태권 옹호).

② 진성 보수: 경제 현안과 사회 현안에 대해 모두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 이 부류에 속하는 사람은 정부의 시장 개입에 반대하고(법인세 인하, 노동조합 규제), 개인의 권리 보장보다는 사회 관행 및 규범의 수호에 앞장선다(동성 결혼 반대, 성평등 조항 삽입 개헌안 반대).

③ 자유 지상주의자: 경제 현안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나, 사회 현안에 대해서는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 이 부류에 속하는 사람은 정부의 시장 개입에 반대하면서 동시에 정부의 개인 자유 침해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즉, 친기업 정책을 지지하는 동시에 낙태, 동성애, 양심적 병역 거부 등과 같은 개인의 선택에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④ 구세대 사회주의자: 경제 현안에 대해서는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나, 사회 현안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 이 부류에 속하는 사람은 정부의 시장 개입에는 지지를 표명하면서도, 사회 문화 영역에서 관행과 전통 혹은 규범을 해치는 개인 행동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한다.

정치 이념을 1차원적으로 보는 대신에 두 개의 차원을 활용해서 파악하면, 얼핏 모순되어 보이는 태도와 의견을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 특히 세 번째와 네 번째 부류의 행태는 정치 이념을 1차원적으로 이해했을 때 설명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고 보수로 분류된 사람이 동성 결혼을 찬성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 느끼는 불편함, 혹은 환경 보호를 위해 대기업이 세금을 더 물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고 진보로 분류한 사람이 여성에게 더 관대한 육아 휴직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것을 확인할 때 느끼는 불편함은 정치 이념을 2차원적으로 이해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치 현안을 경제 현안과 사회 현안으로 분류하기 어렵다. 한국의 정치 이념 지형을 결정하는 데에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 관련 현안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북한의 핵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사드 배치 혹은 전술핵 재배치를 지지하고 반대하는 입장은 정부와 시장 간 대립 구도에 근거한 것이 아니어서 경제 현안에 대한 입장이라 보기도 어렵고, 사회와 개인 간 대립 구도에 근거한 것도 아니기에 사회 현안에 대한 입장이라 보기도 어렵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 관련 현안으로 정치 이

념을 구성하는 제3의 차원을 만드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 이념에 따라 사람들을 나누는 범주가 8개(경제 현안 진보 혹은 보수×사회 현안 진보 혹은 보수×북한 현안 진보 혹은 보수)가 되어 지나치게 복잡한 분석 틀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정리하자면 현재 정당 간 양극화로 인해 입법 교착상태가 빈번한 상황에서 유권자들의 정당 이념 인식 역시 영향을 받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우선 지지하는 정당이 있는 유권자들은 그렇지 않은 유권자들에 비해 진보 혹은 보수의 이념 성향을 더 강하게 보일 것이다. 더 나아가 지지하는 정당이 있는 유권자들은 그렇지 않은 유권자들에 비해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정당의 이념 위치를 상대적으로 멀리 책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향성은 대북 정책, 한미 동맹, 부동산 문제, 복지, 성소수자, 가짜뉴스 등과 같은 구체적인 현안을 놓고 설정하는 유권자 본인의 입장 및 정당의 입장을 비교해도 유사하게 나타날 것이다. 다만 주어진 현안이 경제 현안인지, 사회문화 현안인지, 북한 관련 현안인지에 따라 정당 간 이념 거리 인식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인다면 유권자의 이념 인식의 다차원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설들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 분석을 수행할 것이다.

III. 한국 유권자의 정당일체감

한국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일상적으로 실시되는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빠지지 않고 포함되는 항목이다. 그러나 유권자가 특정한 정당을 지지한다고 대답했을 때 정작 그러한 지지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는 그다지 알려진 바가 없다. 유권자의 태도와 행태를 다루는 학술적인 연구에서도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혹은 일체감(identification)은 다른 여러 정치적 변수들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변수로 취급되지만, 역시 한국 유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당일체감의 본질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유권자가 정당에 대해 가지는 당파심(partisanship)은 크게 정서적 당파심과 도구적 당파심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서적 당파심은 유권자들이 정당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를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social identity)의 표현으로 보는 입장이며, 정당의 국정운영성과나 정당 지도자의 교체 등과 같은 정치적 요인보다는 각자의 삶의 경험과 가치관에 의해 형성되는 따라서 쉽사리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한다. 반면에 도구적 당파심은 정부에 대한 평가 및 이념 성향, 정책 선호 등과 같이 유권자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정당에 대한 선호에 끼치는 영향력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 유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당일체감은 정서적 당파심과 도구적 당파심 중 어느 쪽에 더 가까운 모습을 보이는가? 이 장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한다.

1. 정서적 당파심: 당파적 정체성

사회적 정체성으로서의 정당일체감, 즉 당파적 정체성(partisan identity)은 다음과 같이 측정되었다. 먼저 특정한 정당에 대해 일체감을 느끼는지 질문하고, 어떤 정당에 대해서도 일체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무당파를 제외한 나머지 응답자들에게 자신이 일체감을 가지고 있는 정당과 관련하여 다음의 7개 진술에 대해 얼마나 동의 혹은 반대하는지 질문하였다. (1) “다른 사람들이 [정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신경이 쓰인다,” (2) “다른 사람들이 [정당]에 대해 안 좋게 이야기하면 내가 공격받는 느낌이 든다,” (3) “나

는 [정당]을 지지하는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점이 많다,” (4) “[정당]의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여론조사결과를 접하면 우울한 기분이 든다,” (5)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을 만나면 왠지 친근한 느낌이 든다,” (6) “다른 사람들이 [정당]에 대해 좋게 이야기하면 나도 기분이 좋아진다,” (7) “나는 [정당]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 정당”이라고 1인칭으로 표현하곤 한다.” 이상의 진술들은 사회적 정체성(social identity) 이론에 기반하여, 응답자가 일체감을 느끼는 정당을 얼마나 스스로의 자아 정체성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Greene 1999; Huddy, Bankert, and Davies 2018; Huddy, Mason, and Aarøe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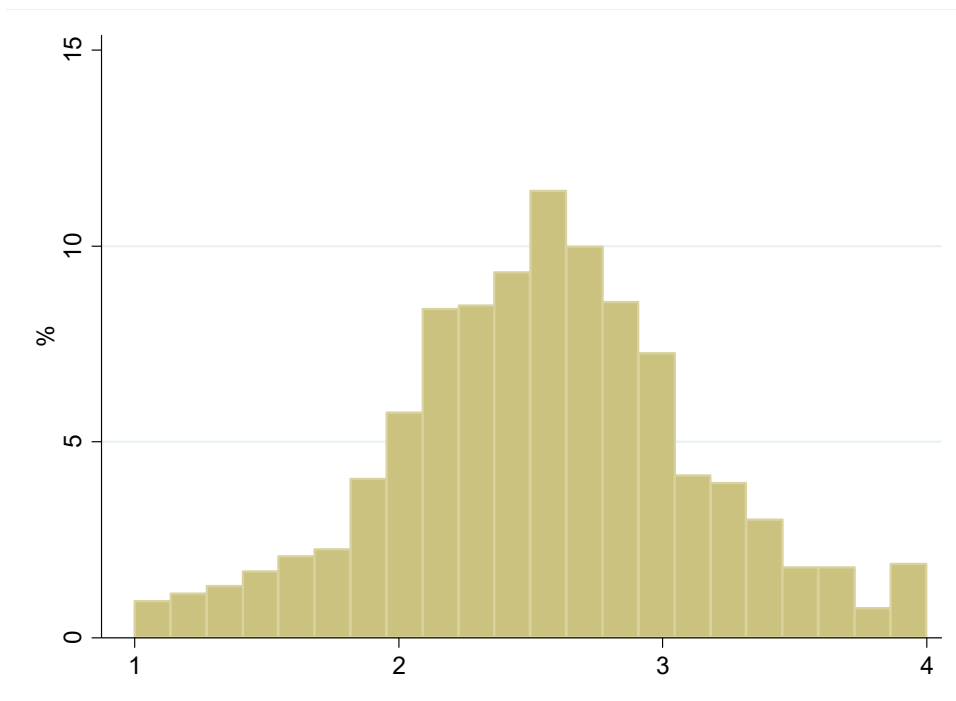
<표3-1> 당파적 정체성: 문항별 분포 (% , N = 1061)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다른 사람들이 [정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신경이 쓰인다”	8.95	51.08	34.40	5.56
“다른 사람들이 [정당]에 대해 안 좋게 이야기하면 내가 공격받는 느낌이 든다”	7.16	38.83	41.28	12.72
“나는 [정당]을 지지하는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점이 많다”	11.59	59.57	24.60	4.24
“[정당]의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여론조사결과를 접하면 우울한 기분이 든다”	9.24	39.21	38.83	12.72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을 만나면 왠지 친근한 느낌이 든다”	15.27	56.83	21.68	6.22
“다른 사람들이 [정당]에 대해 좋게 이야기하면 나도 기분이 좋아진다”	15.55	52.50	25.45	6.50
“나는 [정당]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 정당”이라고 1인칭으로 표현하곤 한다”	5.84	17.72	47.41	29.03

<표3-1>은 응답자들 사이에서 7개의 진술에 대한 응답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7개 진술 중 4개 진술에 대해 과반수의 응답자들이 매우 혹은 조금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의 응답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일체감을 느끼는 정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신경이 쓰

이며, 자신과 동일한 정당을 지지하는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며, 같은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을 만나면 왠지 친근한 느낌이 들고, 다른 사람들이 지지하는 정당에 대해 좋게 이야기하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대답했다. 나머지 3개 진술 중 2개(“다른 사람들이 지지하는 정당에 대해 안 좋게 이야기하면 내가 공격받는 느낌이 든다”와 “지지하는 정당의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여론조사결과를 접하면 우울한 기분이 든다”)에 대해서도 절반에 가까운 46%와 48%의 응답자들이 동의를 표시했다. 전반적으로 <표3-1>의 결과는 한국 유권자들이 자신이 일체감을 느끼는 정당을 스스로의 정체성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정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최종적으로 당파적 정체성은 7개 진술 각각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1-4점 척도로 측정된 값의 평균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그림3-1>은 이와 같이 구성된 당파적 정체성이 한국 유권자들 사이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전체 유권자 사이의 분포는 중간 정도의 값을 가진 응답자 숫자가 가장 많은 반면에 정당일체감을 사회적 정체성으로 받아들이는 정도가 극단적으로 높거나 낮은 응답자의 숫자는 적은, 전형적인 정규분포와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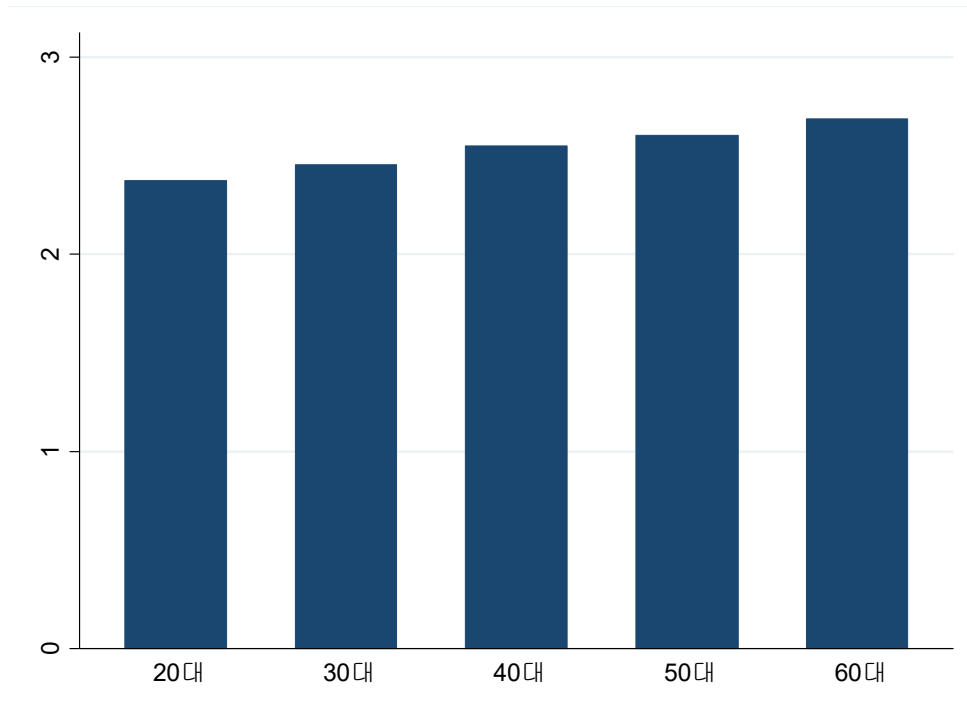
<그림3-1> 당파적 정체성, 전체 응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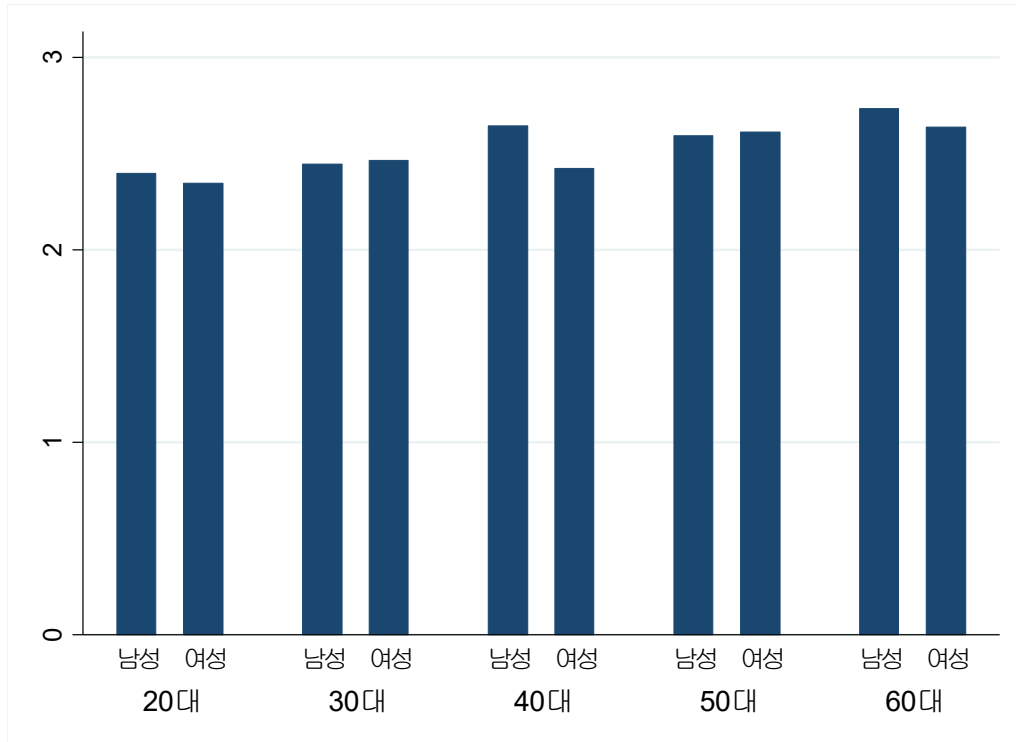
물론 유권자 개개인이 정당일체감을 사회적 정체성으로 받아들이는 정도는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하에서는 다양한 사회경제적·정치적 특징에 따라 정당일체감을 사회적 정체성으로 받아들이는 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그림3-2>는 응답자의 연령대에 따라 당파적 정체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 따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정당일체감을 사회적 정체성으로 받아들이는 정도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분산분석(anova) 결과에 따르면 연령대에 따라 당파적 정체성이 증가하는 것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 = 5.42, p < 0.001$). 반면에 성별에 따른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3-3>은 연령대별로 성별에 따라 당파적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남성 응답자와 여성 응답자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유일하게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난 연령대는 40대였으며, 40대 응답자들 사이에서는 여성에 비해 남성들이 정당일체감을 사회적 정체성으로 받아들이는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 = 2.34, p = 0.02$).

<그림3-2> 당파적 정체성,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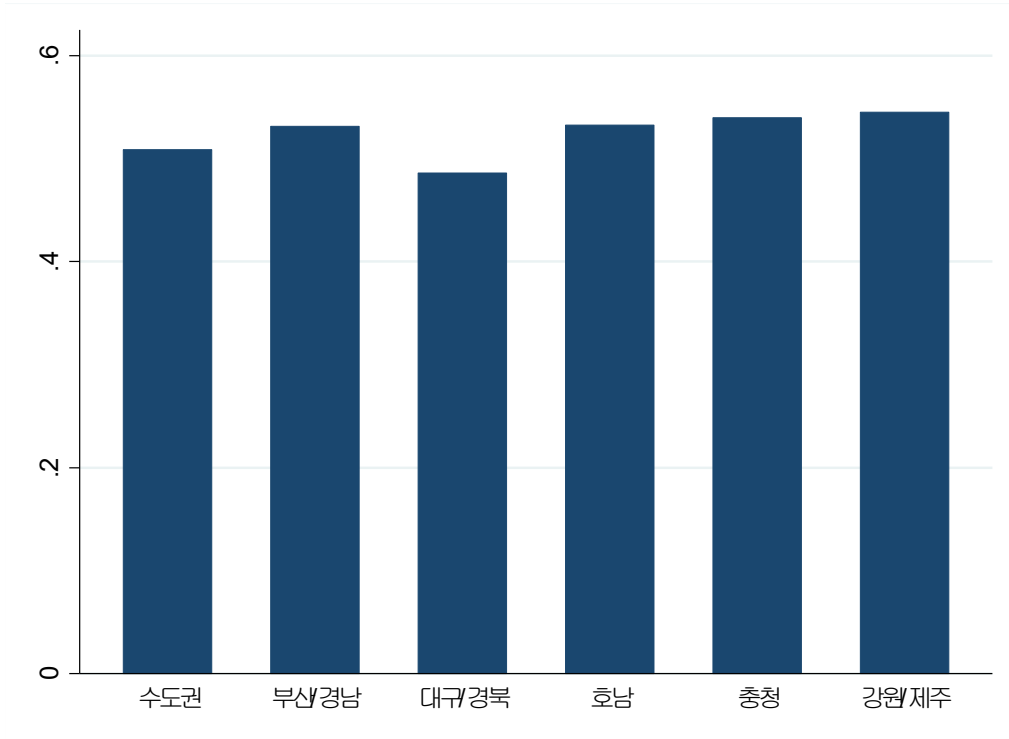
<그림3-3> 당파적 정체성, 성별/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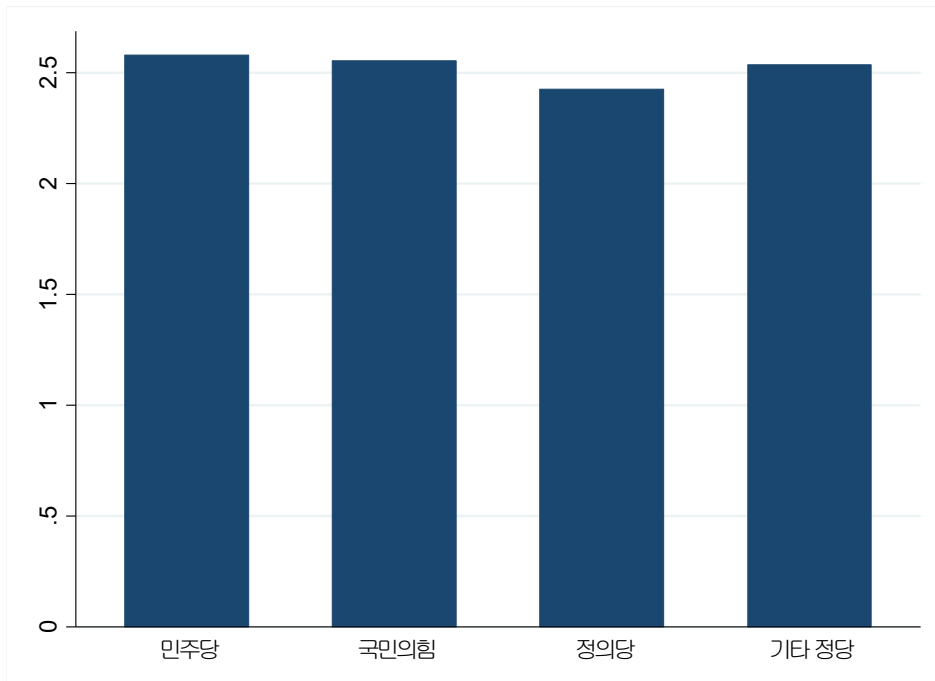
<그림3-4>에서는 한국 정치의 또 다른 중요한 균열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 따른 당파적 정체성을 살펴보고 있다. 비록 2000년대 이후 세대균열의 등장과 함께 그 영향력이 다소 약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지역균열은 여전히 한국 정당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균열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분석 결과는 지역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F = 1.45, p = 0.2$). 특히 지역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영남 지역이나 호남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라고 해서 수도권 유권자에 비해 특별히 정당일체감을 사회적 정체성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더 크지는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그림3-5>에서는 일체감을 느끼는 정당에 따라 해당 정당에 대한 일체감을 사회적 정체성으로 인식하는 정도를 살펴보고 있다. 결과는 민주당 지지자와 국민의힘 지지자 사이에, 그리고 양대 정당과 정의당을 비롯한 군소 정당 지지자 사이에 정당일체감을 사회적 정체성으로 느끼는 정도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정당에 대해서 일체감을 느끼는가와 정당일체감을 사회적 정체성으로 받아들이는 정도 사이에는 별다른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그림3-4> 당파적 정체성, 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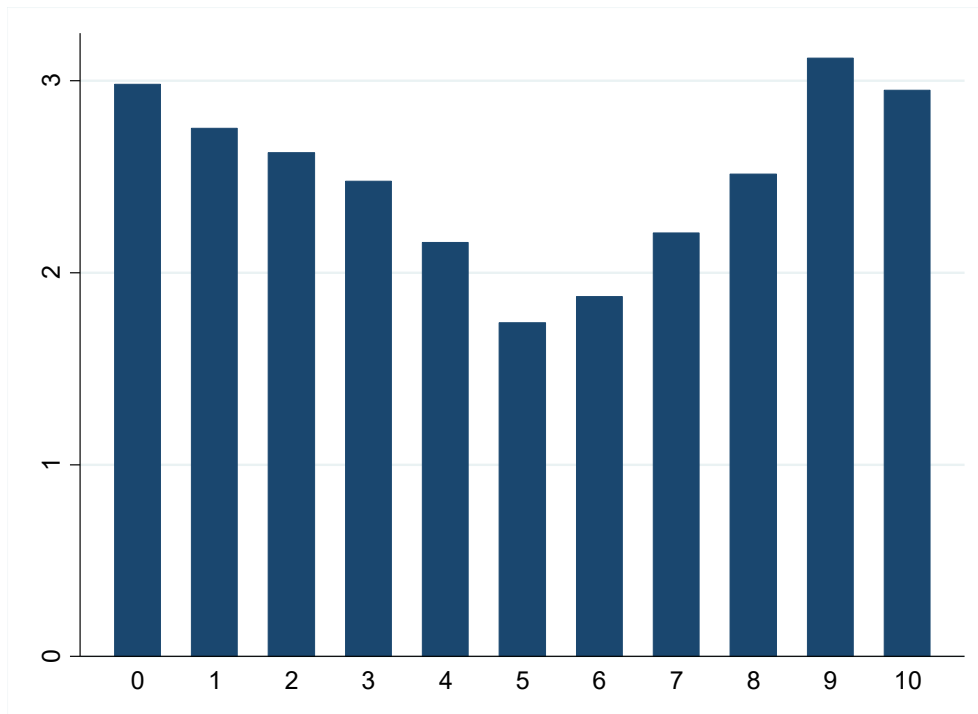


<그림3-5> 당파적 정체성, 정당일체감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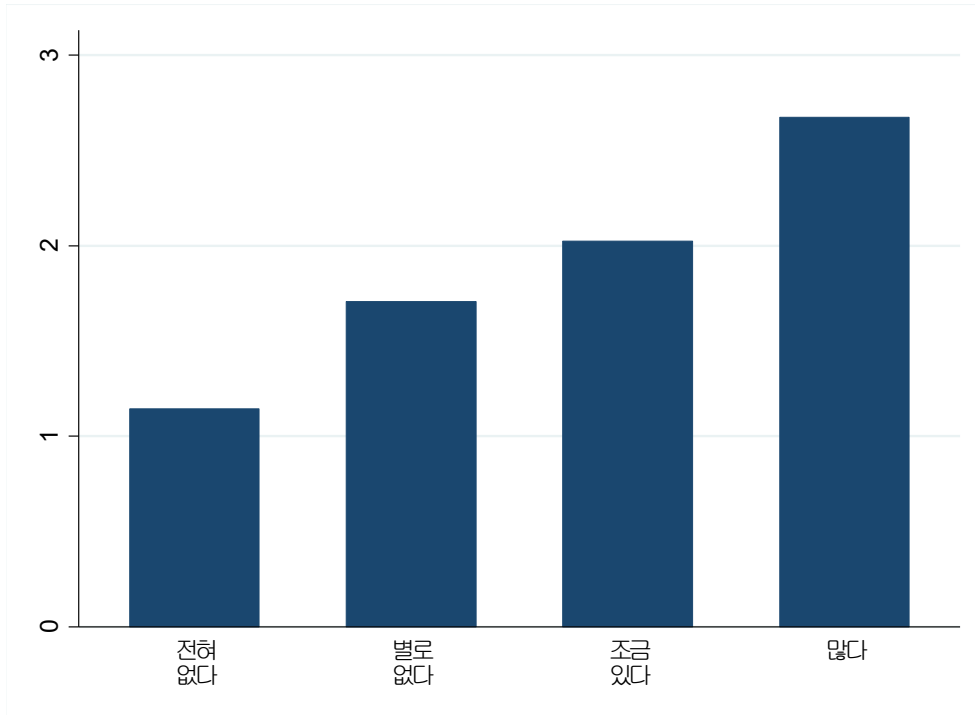
물론 <그림3-5>는 기본적으로 특정한 정당에 대해 일체감을 느끼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무당파 유권자들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그림3-6>은 진보-보수 이념성향에 따라 당파적 정체성을 살펴보고 있다. 이념성향은 가장 진보를 의미하는 0부터 중도를 의미하는 5를 지나, 가장 보수를 의미하는 10에 이르는 11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결과에 따르면 특정한 정당에 대해 일체감을 느끼더라도, 이념성향이 중도적인 사람들은 정당일체감을 사회적 정체성으로 받아들이는 정도가 약하며, 이념성향이 극단적일수록 정당일체감을 사회적 정체성으로 받아들이는 정도가 강하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림3-6> 당파적 정체성, 이념성향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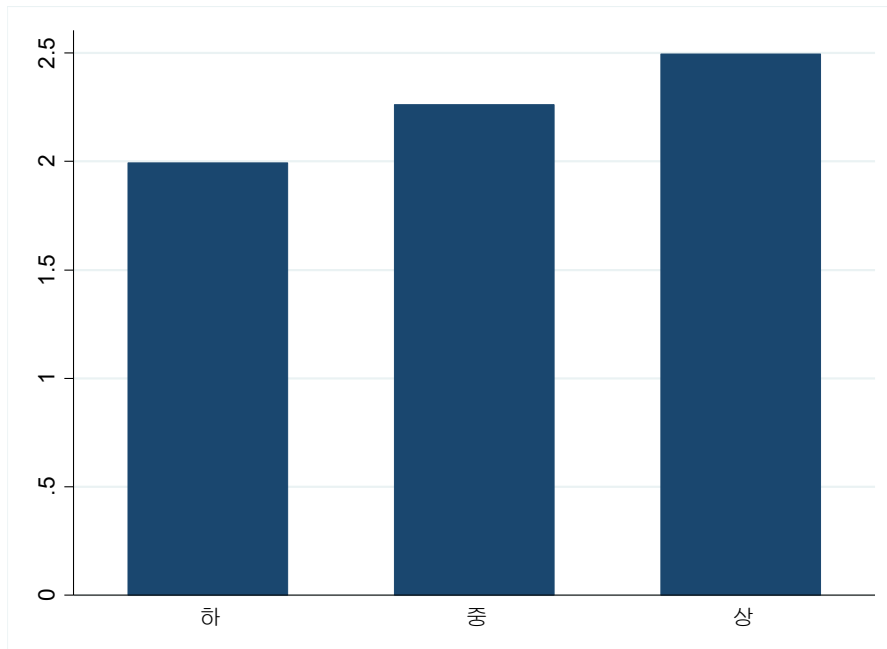


진보 혹은 보수적인 이념성향이 강해질수록 정당일체감을 사회적 정체성으로 더욱 강하게 느낀다는 사실은 당파적 정체성이 정치적 관여도(political engagement)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한다. 이러한 점을 확인하기 위해 <그림3-7>과 <그림3-8>에서는 각각 정치에 대한 관심도와 정치와 관련한 지식 수준에 따라 당파적 정체성이 달라지는지 살펴보고 있다.

<그림3-7> 당파적 정체성, 정치관심도별



<그림3-8> 당파적 정체성, 정치지식 수준별



정치관심도는 1부터 4까지의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되었으며, 정치지식 수준은 정치 및 시사 관련 사실을 묻는 7가지 질문에 대해 올바른 대답을 한 개수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다만 비교의 편의를 위해 정치지식 수준은 0~2개 질

문에 대해 올바르게 대답한 응답자를 ‘하’로, 3~5개 질문에 대해 올바르게 대답한 응답자를 ‘중’으로, 그리고 6개 이상의 질문에 정확한 답을 한 응답자를 ‘상’으로 분류하여 비교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정치관심도와 정치지식 수준 모두 정치적 관여도가 높은 응답자일수록 특정 정당에 대해 느끼는 일체감을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정도가 강해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당파적 정체성은 정치에 높은 관심과 지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유권자들 사이에서 오히려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2. 도구적 당파심: 이념성향과 정책선호

도구적 당파심은 기본적으로 정당에 대한 일체감에 유권자 개인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끼치는 영향력을 반영하며, 보다 구체적으로 진보-보수 이념성향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입장에 있어서 유권자가 지지하는 정당과 얼마나 일치하는가 여부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개념화를 반영하여 도구적 당파심을 본인이 일체감을 가지고 있는 정당과의 사이에서 느끼는 이념적 거리 및 정책선호의 차이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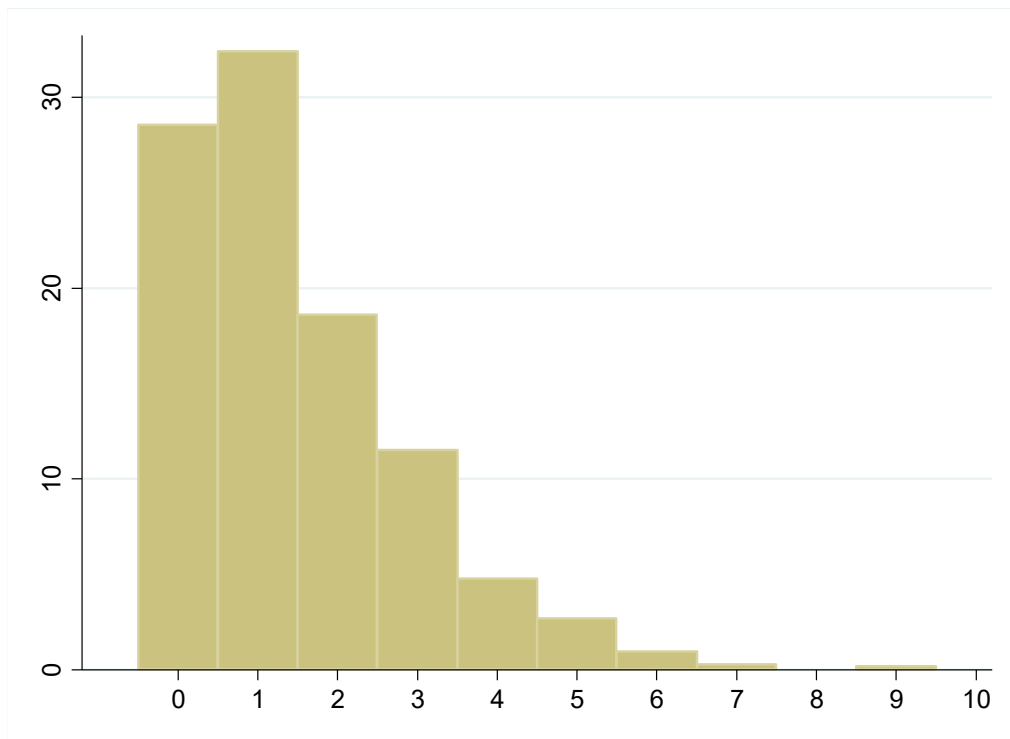
이념적 거리와 정책선호의 차이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이유는 둘이 반드시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정책과 쟁점에 대한 일반 유권자들의 관심 및 지식 부족을 고려한다면, 진보-보수의 자기평가가 정책선호로부터 전적으로 기인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실제로 정책선호 외의 다른 요인들이 유권자의 이념성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는 경험적 증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진보 혹은 보수라는 이념성향과 밀접하게 연관되었다고 인식되는 다양한 정치적 상징(symbols)이나 사회집단에 대한 정서적 평가(affective evaluations)가 유권자들의 이념적 자기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Conover and Feldman 1981).

보다 일반적으로 엘리스와 스톰슨(Ellis and Stimson 2012)은 진보-보수의 이념성향을 상징적 이념(symbolic ideology)으로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선호의 총합을 조작적 이념(operational ideology)으로 정의하고, 이 둘은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로 환원될 수 없는 별개의 개념이며, 상당히 많은 유권

자들 사이에서 상징적 이념과 조작적 이념 사이의 괴리가 관찰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상징적 이념에 있어서는 스스로를 보수라고 평가하면서도 구체적인 정책선호에 있어서는 진보적인(liberal) 입장을 가지는 유권자들이 전체 미국 유권자의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상징적 이념과 조작적 이념 사이에 괴리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엘리스와 스팀슨은 진보-보수의 이념성향은 정치와는 무관할 수 있는 생활습관이나 종교적 태도에서 기인한 사회적·개인적 정체성에 의해 크게 영향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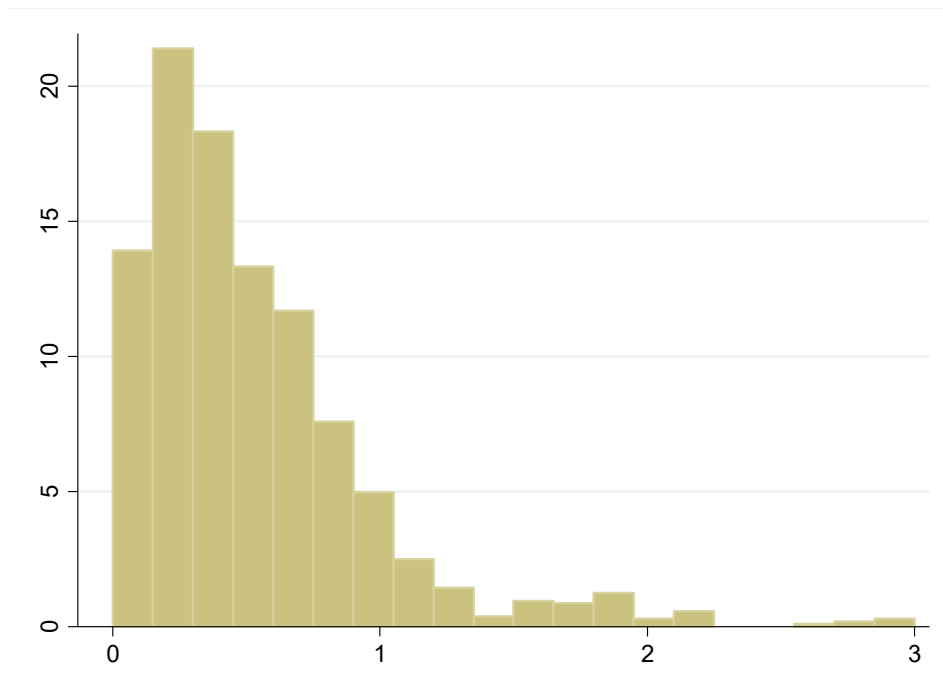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응답자는 가장 진보를 의미하는 0부터 중도를 의미하는 5를 지나, 가장 보수를 의미하는 10에 이르는 11점 척도를 사용하여, 본인 스스로의 위치와 함께 주요 정당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대답하였다. 이 중 응답자가 일체감을 느낀다고 대답한 정당의 이념적 위치와 본인 스스로의 이념적 위치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였다. 계산한 결과, 응답자가 지지 정당과의 사이에서 느끼는 이념적 거리의 분포는 <그림3-9>에서 제시하고 있다.

<그림3-9> 지지 정당과의 이념적 거리 (%)



정책선호의 경우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응답자가 일체감을 느끼는 정당과의 차이를 측정하였다. 먼저 정치, 경제, 사회 등 세 영역에 걸쳐 각 영역별로 2개의 정책에 대한 입장을 질문했다. 정치 영역의 경우 대북 지원 문제와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 방향, 경제 영역의 경우 종부세와 관련한 부동산 정책과 복지 확대 문제, 그리고 사회 영역의 경우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 문제와 가짜뉴스 처벌을 둘러싼 논란 등의 정책에 대한 선호를 물었다. 응답자들은 각 정책에 대해 1-5의 5점 척도로 대답했으며, 값이 커질수록 보다 보수적인 입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코딩하였다. 이와 동시에 동일한 6개의 정책에 대해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여 주요 정당은 어떤 입장일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했다. 최종적으로 유권자 본인의 정책선호와 각 정당의 입장은 6개 정책 각각에 대한 5점 척도의 대답의 평균값을 계산함으로써 구성하였다. 이후 응답자가 일체감을 느낀다고 대답한 정당의 입장과 응답자 본인의 입장 사이의 차이를 계산하였다. <그림3-10>은 정책선호 거리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참고로 전체 응답자 사이에서 정책선호의 차이의 평균값은 0.545였으며 표준편차는 0.457이었다.

<그림3-10> 지지 정당과의 정책선호 차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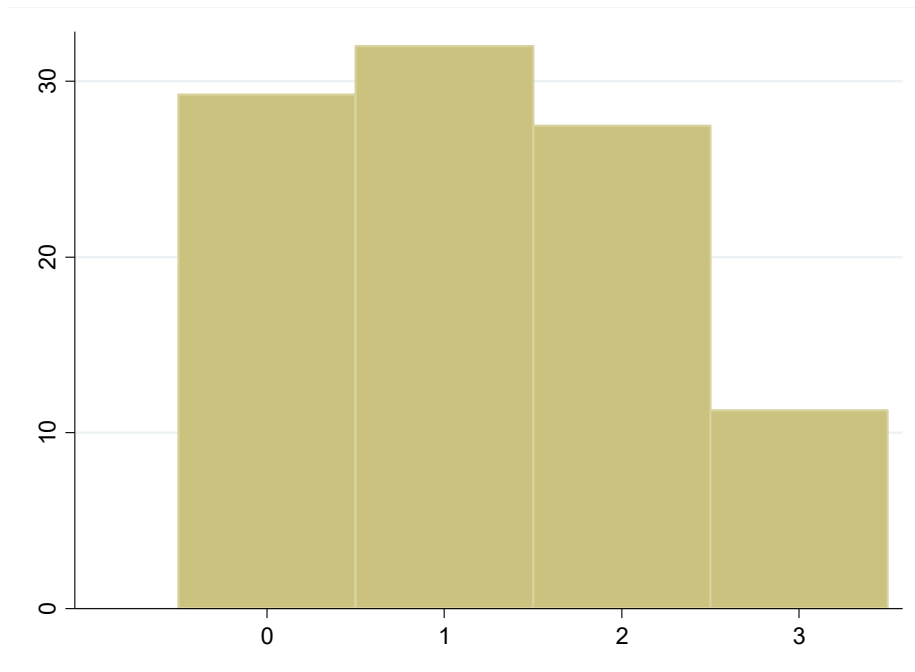
3. 정서적 당파심 vs 도구적 당파심: 통계분석

그렇다면 한국 유권자들이 정당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에는 당파적 정체성과 이념적 거리 및 정책선호의 차이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다시 한국 유권자들의 정당일체감이 정서적 당파심에 보다 가까운 모습인가 아니면 도구적 당파심에 보다 가까운 모습인가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통계분석을 위한 종속 변수로는 정당일체감의 강도를 사용하였다. 당파적 정체성이 강할수록 지지 정당에 대해 보다 강한 일체감을 느낀다면 한국 유권자들이 정당에 대해 가지는 태도는 정서적 당파심에 보다 가까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일체감을 느끼는 정당에 대해 느끼는 이념적 거리나 정책선호의 차이가 증가할수록 정당일체감이 눈에 띄게 약화된다면, 이는 한국 유권자의 정당일체감이 도구적 당파심에 가까운 모습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물론 실제 대부분의 유권자들에게 정당일체감은 정서적 당파심과 도구적 당파심의 양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을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둘 중 어느 것이 정당일체감의 강도에 대해 보다 큰 설명력을 가지는가라고 할 수 있다.

정당일체감의 강도는 다음과 같이 측정되었다. 먼저 응답자에게 평소에 일체감을 느끼는 정당이 있는지 질문하고,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들에게는 그 정당이 어떤 정당인지, 그리고 일체감을 얼마나 강하게 느끼는지 질문하였다. 이때 일체감을 매우 강하게 느낀다고 대답한 사람에게는 3점을 부여하였고, 일체감을 어느 정도 느낀다고 대답한 사람에게는 2점을 부여하였다. 첫 번째 질문에서 평소 일체감을 느끼는 정당이 없다고 대답한 응답자들에게는 “그래도 다른 정당에 비해 조금이라도 더 일체감을 느끼는 정당이 있”는지 질문하였으며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들에게는 1점을 부여하였고, 두 번에 걸친 일체감 질문에 대해 모두 부정적으로 대답한 순수 무당파(pure independents)들에게는 0점을 부여하였다. 다만 여기에서의 분석은 기본적으로 특정한 정당에 대한 일체감을 미약하게나마 느끼는 응답자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0으로 코딩된 무당파 응답자들은 실제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그림3-11>은 종속 변수로 사용된 정당일체감의 강도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그림3-11> 정당일체감의 강도 (%)



분석을 위한 핵심 독립변수는 당파적 정체성, 지지하는 정당과의 이념적 거리, 그리고 지지하는 정당과의 정책선호의 차이이다. 세 변수 모두 서로 다른 척도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인 영향력의 크기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모두 0-1 척도로 변환하여 사용되었다. <표3-2>는 이렇게 변환된 세 독립변수의 기술통계량을 보여주고 있다.

<표3-2> 핵심 독립변수의 기술통계량

	평균	표준편차	범위
당파적 정체성	0.517	0.201	[0, 1]
지지 정당과의 이념적 거리	0.136	0.114	[0, 1]
지지 정당과의 정책선호 차이	0.146	0.143	[0, 1]

종속변수인 정당일체감의 강도가 3점 척도이기 때문에 통계분석 모형으로는 순서형 로짓(ordered logit) 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3-3>에 제시되었다. 결과에 따르면 일단 일체감을 느끼는 정당에 따른 정당일체감의 강도에 있어서의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민주당에 대한 정당일체감을

기준 범주로 하여 국민의힘, 정의당, 기타 정당에 대해 일체감을 가지는가는 정당일체감의 강도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어느 정당에 대해 일체감을 느끼는가와 무관하게 비슷한 수준의 정당일체감 강도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표3-3> 정당일체감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ordered logit 모형

	coefficients (standard errors)
국민의힘 일체감	0.049 (0.141)
정의당 일체감	-0.330 (0.213)
기타 정당 일체감	-0.252 (0.281)
당파적 정체성	5.799** (0.383)
지지 정당과의 이념적 거리	-0.826* (0.448)
지지 정당과의 정책선호 차이	0.554 (0.572)
Pseudo-R ²	0.1447
사례수	10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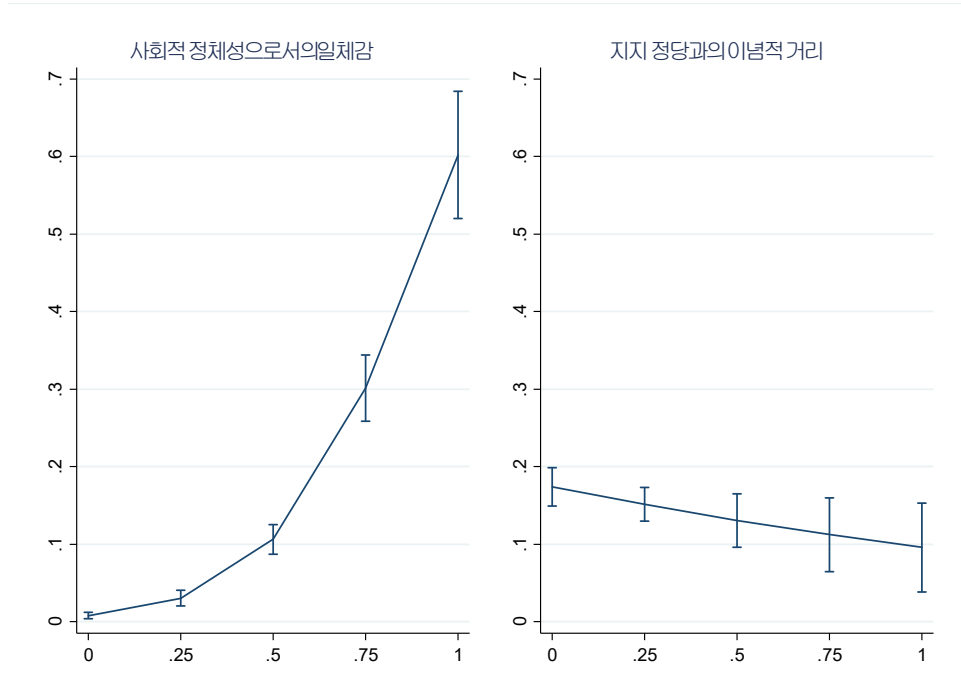
** $p < 0.05$, * $p < 0.1$.

핵심 독립변수 중에는 당파적 정체성과 지지 정당과의 이념적 거리가 정당일체감의 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당일체감을 스스로의 사회적 정체성의 일부로서 받아들일수록 보다 강한 정당일체감을 가질 확률이 증가하며, 동시에 지지하는 정당과의 이념적 거리가 늘어날수록 해당 정당에 대한 일체감의 강도가 약화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지지 정당과의 정책선호에 있어서의 차이는 정당일체감의 강도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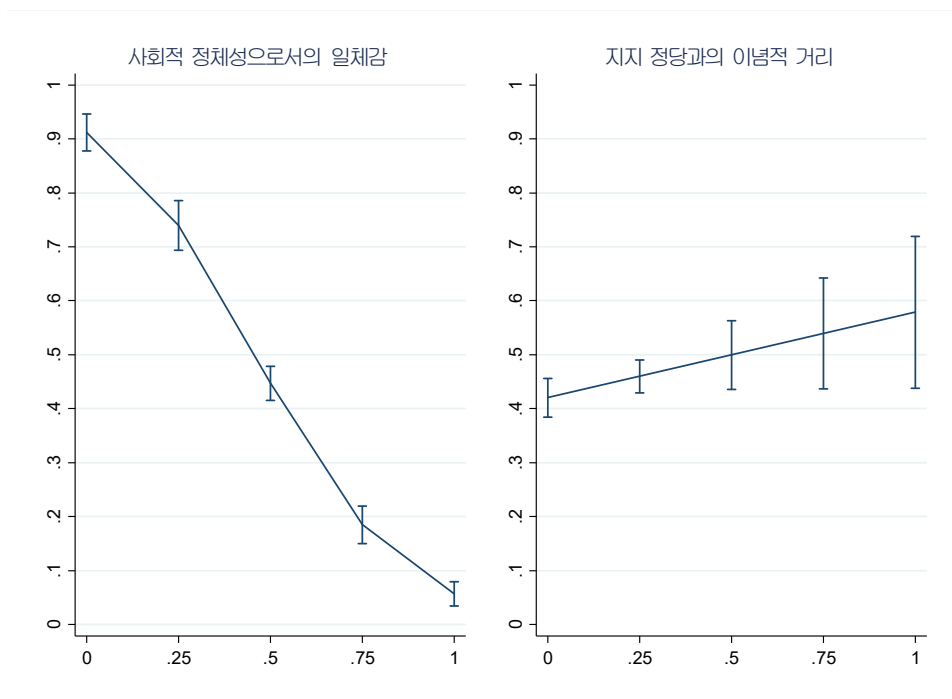
비록 당파적 정체성과 지지 정당과의 이념적 거리가 둘 다 정당일체감의 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상대적인 영향력의 크기에 있어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물론 비선형(non-linear) 모형인 순서형 로짓 모형에서는 계수의 크기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그림3-12>에서는 동일한 0-1 척도로 사용된 두 독립변수의 변화에 따라 응답자가 가장 강한 정당일체감 강도를 보일 확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 따르면 동일한 수준의 변화가 가져오는 확률의 변화 정도가 지지 정당과의 이념적 거리에 비해 사회적 정체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훨씬 더 크다

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그림3-13>에서 가장 약한 정당일체감의 강도를 보일 확률의 변화를 살펴보아도 결론은 동일하다.

<그림3-12> 강한 정당일체감 강도의 확률 변화



<그림3-13> 약한 정당일체감 강도의 확률 변화



<표3-3>의 분석은 정당일체감의 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통제변수들을 전혀 포함하지 않은 분석이다. 따라서 당파적 정체성과 지지 정당과의 이념적 거리가 둘 다 정당일체감의 강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여타의 통제변수들을 포함했을 때에도 동일한 결론이 유지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표3-4>에서는 정당일체감의 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통제변수들을 포함하고 동일한 종속변수에 대한 분석을 다시 실시하였다. 통제변수로는 정치지식 수준, 정치관심도, 정치효능감 등 응답자의 정치적 태도와 함께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사용되었다.

<표3-4> 정당일체감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통제변수 포함

	coefficients (standard errors)
국민의힘 일체감	0.044 (0.154)
정의당 일체감	-0.275 (0.221)
기타 정당 일체감	-0.311 (0.291)
당파적 정체성	5.538** (0.413)
지지 정당과의 이념적 거리	-0.875* (0.466)
지지 정당과의 정책선호 차이	-0.357 (0.597)
정치지식 수준	-0.080* (0.043)
정치관심도	0.718** (0.123)
외적 정치효능감	0.207** (0.075)
내적 정치효능감	0.125 (0.124)
연령	-0.007 (0.005)
교육 수준 (대졸 이상 = 1)	-0.540** (0.151)
소득 수준	-0.016 (0.027)
고용 상태 (정규직 = 1)	0.201 (0.164)
고용 상태 (비정규직 = 1)	0.288 (0.253)
고용 상태 (자영업 = 1)	0.195 (0.229)
성별 (여성 = 1)	-0.349** (0.143)
거주 지역	통제됨
Pseudo-R ²	0.1901
사례수	1043

주: 17개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측정된 응답자의 거주 지역을 보여주는 가변인이 포함되었으나 여기에서는 생략되었다. ** $p < 0.05$, * $p < 0.1$.

결과는 통제변수를 포함하지 않았을 때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통제변수를 포함한 이후에도 지지 정당과의 정책선호 차이는 정당일체감의 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으며, 당파적 정체성과 지지 정당과의 이념적 거리가 정당일체감의 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다. 다만 사회적 정체성으로서의 일체감이 정당일체감의 강도에 끼치는 영향력의 크기가 지지 정당과의 이념적 거리에 비해 훨씬 더 크다는 점은 여전히 동일했다.

결과적으로 <표3-3>과 <표3-4>의 결과는 한국 유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당일체감이 도구적 당파심보다는 정서적 당파심으로서의 성격이 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한국 유권자들이 특정 정당에 대해 얼마나 강하게 일체감을 느끼는가는 해당 정당과 이념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얼마나 동의하는가 여부는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대신에 지지하는 정당을 스스로의 사회적 정체성의 일부로서 얼마나 받아들이는가야말로 정당에 대한 일체감을 얼마나 강하게 느끼는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4. 정서적 당파심의 중요성: 집단별 분석

한국 유권자들이 정당에 대해 느끼는 일체감이 도구적 당파심보다는 정서적 당파심에 보다 가까운 모습이라면, 과연 이러한 모습이 전체 유권자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인지 아니면 특정 유권자 집단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인지 확인할 필요가 제기된다. 이를 위해서 이하에서는 유권자의 여러 가지 특성들을 고려한 상호작용항을 통해 <표3-4>의 분석을 다양한 방식으로 재현하고 있다.

먼저 <표3-5>에서는 당파적 정체성과 일체감을 느끼는 정당 사이의 상호작용항을 살펴보고 있다. 민주당 지지자를 기준 범주로 하여 일체감을 느끼는 각 정당과 당파적 정체성 사이의 상호작용항을 고려했을 때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유권자가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가와 무관하게 당파적 정체성이 정당일체감의 강도에 비슷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표3-5> 정당일체감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지지 정당과의 상호작용

	coefficients (standard errors)
국민의힘 일체감	0.283 (0.470)
정의당 일체감	0.443 (0.693)
기타 정당 일체감	0.448 (0.891)
당파적 정체성	5.933** (0.573)
당파적 정체성 × 국민의힘 일체감	-0.437 (0.810)
당파적 정체성 × 정의당 일체감	-1.371 (1.266)
당파적 정체성 × 기타 정당 일체감	-1.431 (1.610)
지지 정당과의 이념적 거리	-0.871* (0.466)
지지 정당과의 정책선호 차이	-0.350 (0.597)
Pseudo-R ²	0.1909
사례수	1043

주: <표3-4>와 동일한 통제변수들이 포함되었으나 여기에서는 생략되었다. ** $p < 0.05$, * $p < 0.1$.

<표3-6> 정당일체감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령과의 상호작용

	coefficients (standard errors)
국민의힘 일체감	0.062 (0.156)
정의당 일체감	-0.256 (0.222)
기타 정당 일체감	-0.266 (0.294)
당파적 정체성	5.845** (0.843)
당파적 정체성 × 20대	-0.205 (1.260)
당파적 정체성 × 30대	-1.311 (1.172)
당파적 정체성 × 50대	0.775 (1.182)
당파적 정체성 × 60대	-0.671 (1.122)
지지 정당과의 이념적 거리	-0.900* (0.470)
지지 정당과의 정책선호 차이	-0.332 (0.602)
Pseudo-R ²	0.1937
사례수	1043

주: <표3-4>와 동일한 통제변수들이 포함되었으나 여기에서는 생략되었다. ** $p < 0.05$, * $p < 0.1$.

<표3-7>에서는 당파적 정체성과 응답자의 거주 지역 사이의 상호작용항을 살펴보고 있다. 수도권 거주 유권자를 기준 범주로 하여 각 지역과 당파적 정체성 사이의 상호작용항을 고려했을 때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호작용항은 호남 지역 유권자와의 상호작용에서 발견되었다. 다시 말해서 호남 지역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다른 지역 유권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정체성으로서의 일체감이 정당일체감의 강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호남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유권자의 거주 지역과 무관하게 당파적 정체성이 정당일체감의 강도에 비슷한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표3-7> 정당일체감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거주 지역과의 상호작용

	coefficients (standard errors)
국민의힘 일체감	0.024 (0.154)
정의당 일체감	-0.304 (0.219)
기타 정당 일체감	-0.311 (0.287)
당파적 정체성	4.662** (0.511)
당파적 정체성 × 부산/경남	1.732 (1.075)
당파적 정체성 × 대구/경북	1.431 (1.459)
당파적 정체성 × 호남	2.554* (1.375)
당파적 정체성 × 충청	0.969 (1.256)
당파적 정체성 × 강원/제주	2.301 (1.987)
지지 정당과의 이념적 거리	-0.886* (0.465)
지지 정당과의 정책선호 차이	-0.487 (0.594)
Pseudo-R ²	0.1875
사례수	1043

주: <표3-4>와 동일한 통제변수들이 포함되었으나 여기에서는 생략되었다. ** $p < 0.05$, * $p < 0.1$.

<표3-8>에서는 당파적 정체성과 정치지식 수준 사이의 상호작용항을 살펴보고 있다. 중간 수준의 정치지식(7개 문항 중 3~5개 정답)을 가진 응답자를 기준 범주로 했을 때, 낮은 수준의 정치지식(7개 문항 중 0~2개 정답)을 가진 응답자들은 사회적 정체성으로서의 일체감이 가지는 영향력에 있어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에 높은 수준의 정치지식(7개 문항 중 6~7개 정답)을 가진 응답자들은 다른 유권자에 비해 당파적 정체성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3-8> 정당일체감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치지식과의 상호작용

	coefficients (standard errors)
국민의힘 일체감	0.045 (0.155)
정의당 일체감	-0.276 (0.220)
기타 정당 일체감	-0.316 (0.290)
당파적 정체성	5.175** (0.515)
당파적 정체성 × 정치지식(하)	0.318 (0.857)
당파적 정체성 × 정치지식(상)	2.039* (1.126)
지지 정당과의 이념적 거리	-0.804* (0.467)
지지 정당과의 정책선호 차이	-0.387 (0.598)
Pseudo-R ²	0.1910
사례수	1043

주: <표3-4>와 동일한 통제변수들이 포함되었으나 여기에서는 생략되었다. ** $p < 0.05$, * $p < 0.1$.

마지막으로 <표3-9>에서는 당파적 정체성과 이념성향 사이의 상호작용항을 살펴보고 있다. 이념성향이 뚜렷하지 않은 중도적 유권자(11점 척도에서 4~6점)를 기준 범주로 했을 때, 진보 혹은 보수적 이념성향이 뚜렷한 응답자들 사이에서 사회적 정체성으로서의 일체감이 가지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중도적 유권자에 비해 이념성향이 뚜렷한 유권자들 사이에서 사회적 정체성으로서의 일체감이 정당일체감의 강도에 끼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이다.

<표3-9> 정당일체감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념성향과의 상호작용

	coefficients (standard errors)
국민의힘 일체감	-0.076 (0.186)
정의당 일체감	-0.314 (0.222)
기타 정당 일체감	-0.297 (0.293)
당파적 정체성	4.225** (0.555)
당파적 정체성 × 진보성향	2.458** (0.882)
당파적 정체성 × 보수성향	1.637* (0.989)
지지 정당과의 이념적 거리	-0.696* (0.468)
지지 정당과의 정책선호 차이	-0.236 (0.598)
Pseudo-R ²	0.2005
사례수	1043

주: <표3-4>와 동일한 통제변수들이 포함되었으나 여기에서는 생략되었다. ** $p < 0.05$, * $p < 0.1$.

5. 소결

본 장에서는 한국 유권자들이 정당에 대해 느끼는 일체감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념성향 및 정책선호를 강조하는 도구적 당파심과 사회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정서적 당파심의 두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한국 유권자들이 특정한 정당에 대해 얼마나 강하게 일체감을 느끼는가에 대해 해당 정당과의 이념적 거리나 정책선호의 차이가 끼치는 영향력은 매우 제한적인 반면에, 정당을 스스로의 정체성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정도야말로 정당일체감의 강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유권자의 정당일체감은 도구적 당파심보다는 정서적 당파심의 성격을 보다 강하게 띠고 있다는 증거를 제공하고 있다.

물론 본 장의 분석이 이미 특정 정당에 대해 일체감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애초에 해당 정당에 대해 일체감을 느끼게 되는 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을 찾아내기는 어렵다. 그러나 본 장의 분석을 통해 한국 유권자의 정당일체감이 정서적 당파심으로서의 성격을 강하

게 드러낸다는 점이 드러났다는 사실은 한국 유권자들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원인이 진보-보수의 이념성향이나 몇몇 쟁점에 대한 선호에 크게 좌우되지 않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다시 말해서 한국 유권자들이 특정한 정당에 대해 느끼는 일체감은 구체적인 이해관계와는 상당히 무관하게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는 다시 매일매일 출령이는 정당 지지도의 변화와는 별개로 한국 유권자들이 특정 정당에 대해 느끼는 일체감은 그들의 정체성에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으며, 정치적 상황의 부침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변화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물론 당파적 정체성이 가지는 중요성은 모든 유권자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비록 한국 정치의 주요 균열이라고 흔히 일컬어지는 세대나 지역과 관련해서는 눈에 띄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주로 정치지식 수준이 높고 특정 이념성향을 강하게 띠는, 다시 말해서 정치적 관여도가 높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당파적 정체성이 가지는 중요도가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정치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정당일체감이 그들의 사회적 정체성의 일부로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한국 정치가 경험하고 있는 당파적 양극화(partisan polarization)와 정책선거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 본 장의 분석은 당파적 양극화를 추동하는 유권자 집단이 다름 아닌 정치적 관여도가 높은 유권자들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정당일체감을 사회적 정체성의 일부로 강하게 받아들이는 정치적 관여도가 높은 유권자들일 수록 정치와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 현재 한국 정치의 당파적 양극화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당파적 양극화를 완화하고 정책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정치적 관여도가 낮은 유권자들을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당파적 정체성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유권자들이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보다 건전한 정책토론과 정책선거가 가능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정책선거를 위한 노력은 단순히 규범적으로 정책선거를 강조하는 것에 그쳐서는 효과를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전반적인 투표율과 참여율을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IV. 한국 유권자의 정당 이념 인식

한국 현대정치사에서 정당은 유권자에게 정책 방향과 가치관을 효과적으로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과 같이 오랜 기간 동안 진보 이념과 보수 이념을 각각 대변하는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체제를 유지한 것도 아니고, 다수의 서구 유럽 국가들처럼 다당제를 취하면서도 명확한 정당의 강령을 유권자들에게 각인시키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대신 대한민국의 정당사는 권력 획득을 위한 이합집산으로 점철되었고, 실질적으로 영향력 있는 보스의 사조직 혹은 특정 지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자발적 결사체로서의 모습을 보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잦은 창당과 합당, 그리고 분당이 이어져 옴에 따라 한국 유권자들은 안정된 정당정치의 인식들을 성립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7년 민주화 이후 크게 두 개의 이념 지형으로 정당들을 나누어 볼 수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그 계열의 이전 정당들은 진보 이념을 대표하는 정당으로, 현재 국민의힘과 그 계열의 이전 정당들은 보수 이념을 대표하는 정당으로 여겨진다. 물론 여기서 이야기 하는 진보와 보수 개념에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상대적으로 경제 분야에서 시장 논리 보다는 국가의 규제에 방점을 찍는 반면, 국민의힘은 반대 경향을 보인다는 통념, 더불어민주당은 상대적으로 북한에 대해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 국민의힘은 보다 강경한 입장을 선호한다는 상식,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사회 소수자(비정규직, 여성, 성소수자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한 평등 가치를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자유라는 가치를 더 중요시한다는 인식이 한국 사회에 공유되고 있음은 사실이다. 이처럼 두 개의 거대 정당을 각각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에 위치시켜 놓고 나서, 나머지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소수 정당들의 이념 위치를 확인하면 정당의 이념 지도의 윤곽을 살펴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한국의 유권자들이 21대 국회에서 최소 3석 이상을 보유한 정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의 이념 위치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살펴본다. 우선 진보-보수라는 일차원적 기준을 적용하여 각 정당의 이념 위치를 확인한 후, 설문 응답자 본인의 이념 위치와 각 정당의 이념 위치 간의 거리를 계산하여 각 정당과의 이념 일치 정도를 파악하

고, 그 결정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같은 내용의 분석을 세 개 영역(정치, 경제, 사회), 여섯 개의 현안에 대한 응답자 본인의 입장과 응답자가 생각하는 각 정당의 입장을 보고한 정보를 활용하여 수행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현재 한국 유권자들에게 이념적으로 선명해 보이는 정당이 어느 정당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대답이 가능할 것이다.

1. 정당 이념 위치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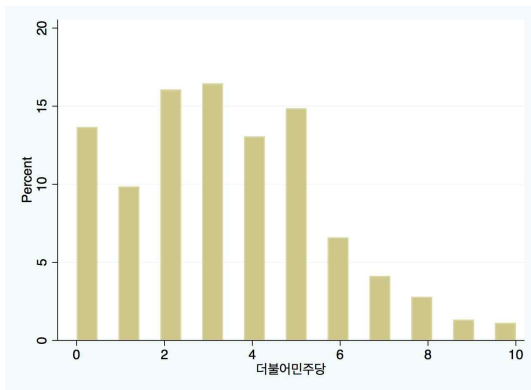
한국 정당은 1998년 당시 진보적인 입장을 대변한다고 알려진 야당 출신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부터 이념적 분화를 본격적으로 겪기 시작하였다. 이후 선거나 정당 정치에서 보수-진보 정당 간의 이념 갈등이 심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한국 유권자들이 현재 주요 정당이 표방하는 이념적 좌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 작업을 위해 단도직입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설문 응답자들에게 던졌다: “정치에서 사람들은 보통 진보와 보수를 구분합니다. 0부터 10까지 눈금 중에서 귀하께서는 다음의 정당[정당명 랜덤으로 제시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이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0은 매우 진보를 나타내며, 10은 매우 보수를 나타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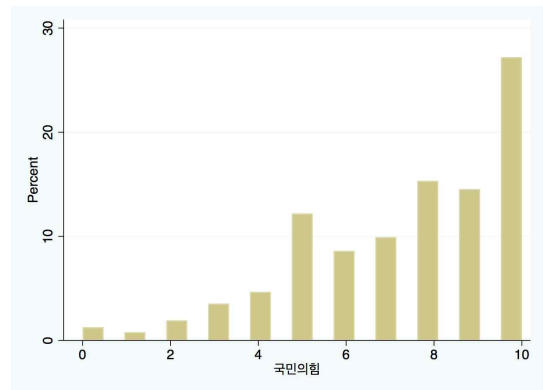
<그림 4-1>에 결과가 정리되어 있다. 설문조사가 대표성을 띤 표본을 활용하여 진행되었다는 전제하에, 한국 유권자들은 일반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진보 이념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보수 이념을 대표하는 정당으로 인식되고 있다. 응답의 분포를 비교해 보면, 더불어민주당을 진보 정당으로 규정하는 비율보다, 국민의힘을 보수 정당으로 규정하는 비율이 훨씬 큼을 알 수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응답자들에게는 충분히 진보적인 정당이 아님을 의미하는 동시에, 국민의힘의 보수 경향성에는 이견이 별로 없음을 의미한다. 반면 군소정당인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 보다 약간 더 진보적인 정당이라고 인식되고 있고, 국민의당은 국민의힘 만큼은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보수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보여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2020년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더불어민주당에서 갈라져 나온 열린민주당의 이념 위치는 더불어민주당의 그것과 유사하다고 유권자들이 판단하고 있다. 평균

값을 비교해 보면, 가장 보수적인 위치로부터 가장 진보적인 위치까지 국민의 힘,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의 순서로 나열됨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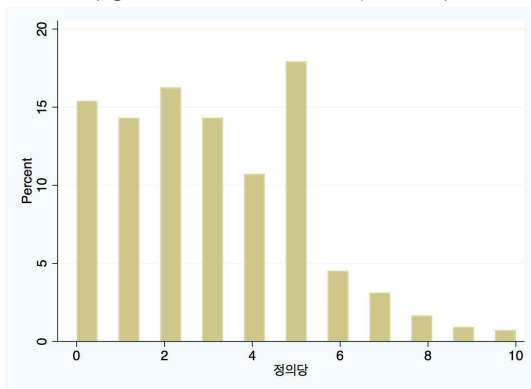
<그림 4-1> 정당 이념 위치 인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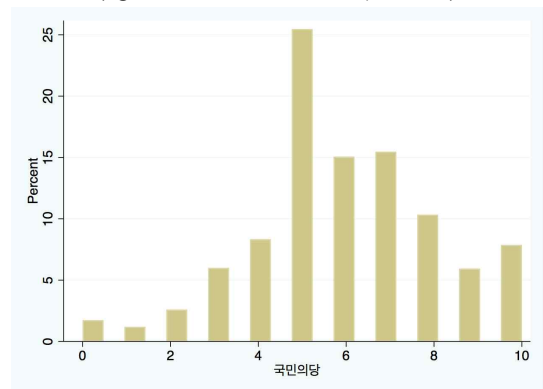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
(평균=3.22; 표준편차=2.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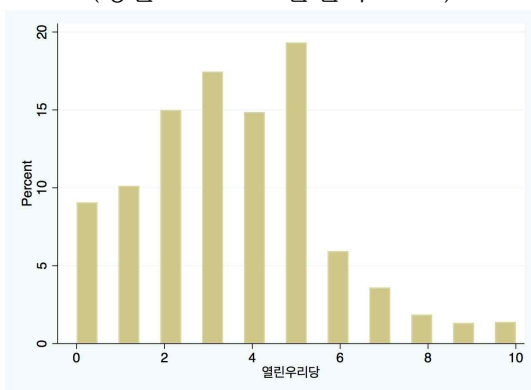
국민의힘
(평균=7.42; 표준편차=2.44)



정의당
(평균=3.01; 표준편차=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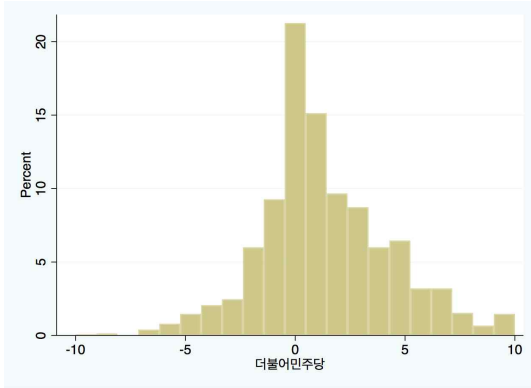
국민의당
(평균=5.98; 표준편차=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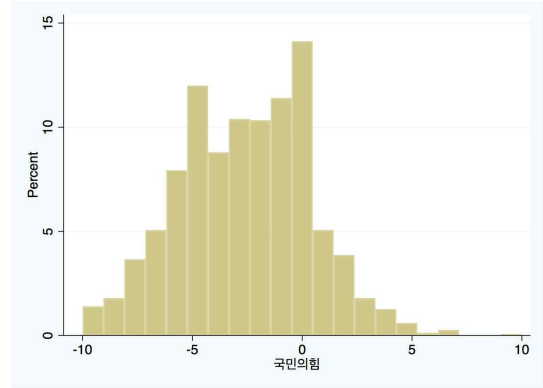
열린민주당
(평균=3.50; 2.19)

주: “0=진보”, “10=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각 정당의 이념 위치를 자가 보고한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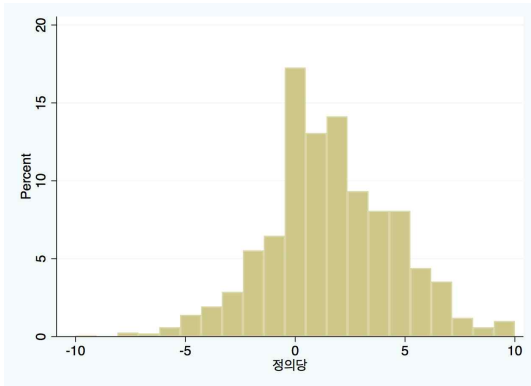
<그림 4-2> 응답자 본인과 정당 간의 이념 거리 인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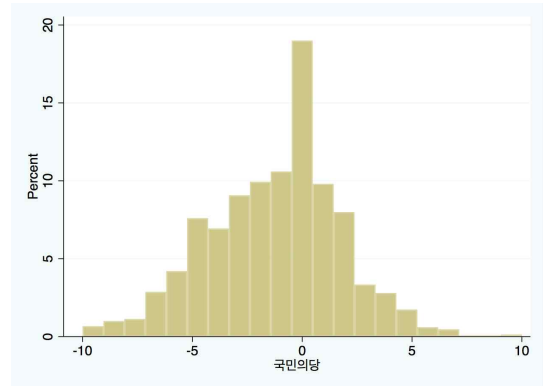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
(평균=1.38; 표준편차=3.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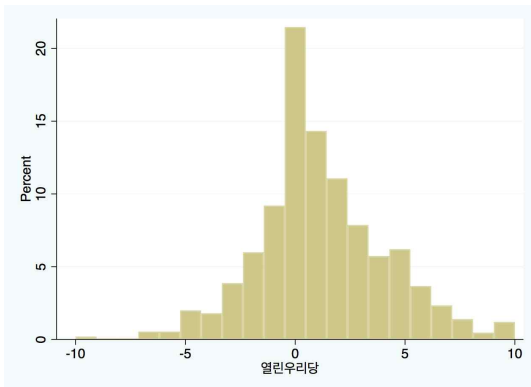
국민의힘
(평균=-2.71; 표준편차=3.17)



정의당
(평균=1.69; 표준편차=3.05)



국민의당
(평균=-1.28; 표준편차=3.17)



열린민주당
(평균=1.20; 표준편차=3.08)

주: 자가보고한 응답자 본인의 이념 위치값에서 응답자가 생각하는 각 정당의 이념 위치값을 뺀 정보임. 최솟값 -10은 “응답자 본인은 진보(0), 정당은 보수(10)”인 경우를 의미하고 최댓값 10은 “응답자 본인은 보수(10), 정당은 진보(0)”를 의미함.

위의 질문과 유사한 방식으로, 설문 응답자들에게 본인의 이념 위치를 알려 달라는 별도의 문항을, “0=진보, 10=보수”와 같이 11점 척도로 물어보았더니

평균값이 4.70, 표준편차는 1.97이었다. 이 정보와 각 정당의 이념 위치 인식 정보를 활용하여 설문 응답자 본인과 각 정당 간의 이념 거리 인식이 어떠한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 4-2>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4-2>에 제시된 정보는 자가보고한 응답자 본인의 이념 위치 값에서 응답자가 생각하는 각 정당의 이념 위치 값을 뺀 정보이다. 따라서 최솟값 -10은 “응답자 본인은 진보(0), 정당은 보수(10)”인 경우를 의미하고 최댓값 10은 “응답자 본인은 보수(10), 정당은 진보(0)”를 의미한다. 만약 응답자 본인의 이념 위치와 응답자가 인식한 특정 정당의 이념 위치가 동일하다면 이 변수의 값은 0을 갖게 된다.

분포가 가장 한쪽으로 치우친 정당은 국민의힘이다. 국민의힘의 분포가 음수의 영역에 몰려 있다는 것은 평균적으로 한국 유권자들의 이념 위치에 비해 국민의힘의 이념 위치가 보수로 쏠려 있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평균적인 유권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보(그래프에서 양수의 영역)로 쏠린 정당은 정의당임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당의 경우 비교적 평균적인 유권자의 이념 위치와 유사하면서도 온건한 보수,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경우 온건한 진보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의 연장선상에서 설문 응답자들 중 어느 정도가 특정 정당과 이념 위치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추가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정보는 다음의 공식을 활용하여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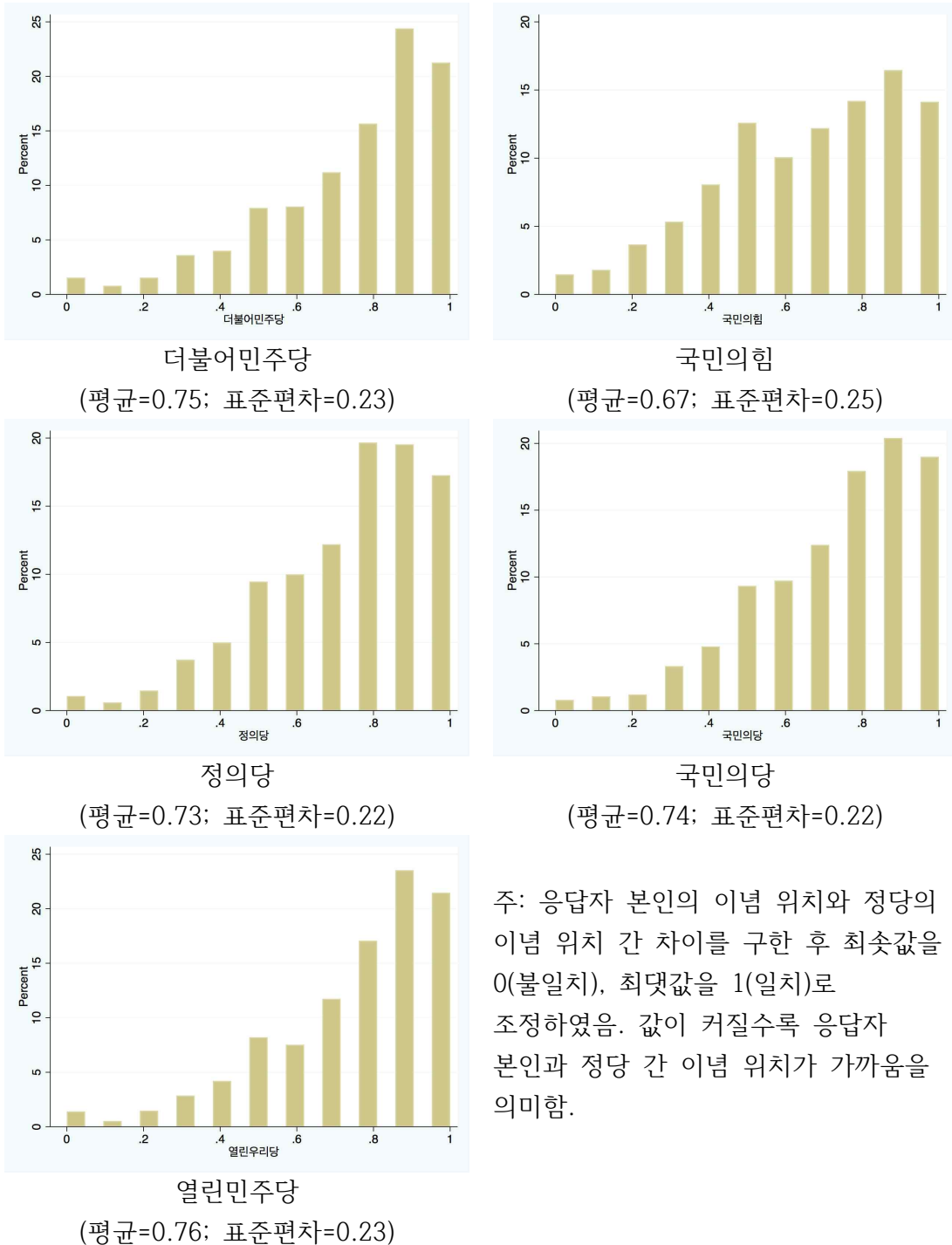
특정 정당과의 이념 일치 정도

$$= 1 - |(응답자 본인 이념 위치 - 특정 정당 이념 위치)/10|$$

이 공식에 따르면 특정 정당의 이념 위치가 응답자 자신의 이념 위치와 동일한 경우 1의 값을, 특정 정당의 이념 위치가 응답자 자신의 이념 위치에서 가장 먼 경우 0의 값을 갖는다. 결과는 <그림 4-3>에 정리되어 있다. 각 정당별 분포의 차이가 크지는 않은데, 국민의힘 결과가 조금 특이해 보인다. 다른 정당의 경우 응답자 본인의 이념 위치와 그 정당의 이념 위치가 일치한다고 보고한 응답자의 비율이 20% 안팎임에 비해,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15%도 채 안됨을 확인할 수 있다. 평균값을 비교해 보아도, 국민의힘과의 이념 일치 정도 평균값은 0.67로 0.70을 넘는 다른 정당의 평균값에 비해 작은

수치이다. 이는 앞에서 확인한 내용인, 국민의힘이 설문 응답자(그리고 설문이 전체 한국 유권자를 정확히 대표한다면 한국 유권자)의 이념 위치에서 상대적으로 보수의 방향으로 멀다는 점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그림 4-3> 정당과의 이념 일치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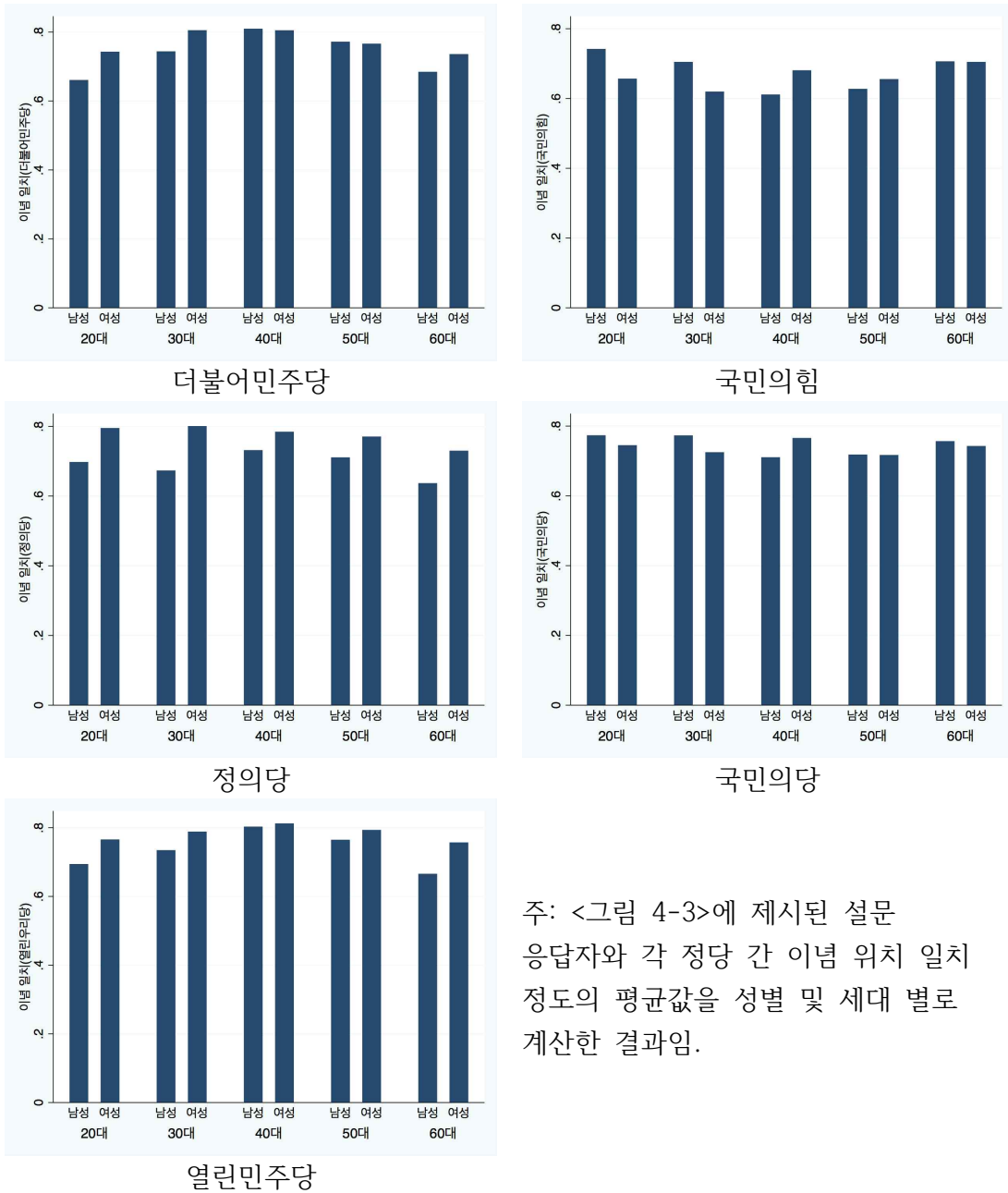
주: 응답자 본인의 이념 위치와 정당의 이념 위치 간 차이를 구한 후 최솟값을 0(불일치), 최댓값을 1(일치)로 조정하였음. 값이 커질수록 응답자 본인과 정당 간 이념 위치가 가까움을 의미함.

설문 응답자 본인과 정당 간의 이념 일치 정도가 집단별로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작업을 수행해 보았다. 최근 한국정치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세대 간, 성별 간 갈등의 연장선상에서 정당 이념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세대와 성별을 주요 관심 집단으로 삼았다. 구체적으로 <그림 4-3>에서 제시된 정보의 평균값을 각 정당별로, 세대와 성별 기준으로 나누어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 4-4>에 기입되어 있다.

<그림 4-4>에 제시된 결과는 한국 정당과 이념 위치를 공유하는 유권자의 비율이 정당별, 성별, 세대별로 사뭇 다름을 보여준다. 더불어민주당과 이념 위치를 공유하는 비율은 20대 및 30대 응답자, 그리고 60대 응답자에게서 상대적으로 작다. 특히 20대 남성의 비율이 60대 남성만큼 작은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 국민의힘과 이념 위치를 공유하는 비율은 20대 및 30대 남성 응답자에게서 크게 나타난다. 심지어 20대 남성 응답자의 이념 공유 비율은 60대 응답자의 그것보다 더 크다. 이는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확인된 2030세대 남성 유권자의 보수화 경향과 일치하는 결과라 흥미롭다. 한편, 정의당의 경우 세대를 막론하고 남성 응답자보다 여성 응답자에게서 높은 이념 일치도를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당 결과는 국민의힘 결과, 열린민주당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결과와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설문 응답자들은 주요 정당들 중에서 국민의힘을 가장 보수적인 정당, 정의당을 가장 진보적인 정당을 인식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상대적으로 온건한 보수,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온건한 진보를 대변하고 있다고 여긴다. 응답자의 이념 위치와의 상대적 거리를 측정해 본 결과, 국민의힘이 보수적인 방향으로 치우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것보다 약간 약한 정도로 정의당이 진보적인 방향으로 치우쳐 있음을 확인하였다. 설문 응답자의 이념 위치와 각 정당의 이념 위치 간 일치 정도를 세대와 성별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2030세대 남성의 보수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 절에서는 이 결과가 자가보고된, 일차원적 진보-보수 구분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 기준으로도 재확인되는지를 검토한다.

<그림 4-4> 정당과의 이념 일치 정도: 세대 및 성별 기준 (%)



주: <그림 4-3>에 제시된 설문 응답자와 각 정당 간 이념 위치 일치 정도의 평균값을 성별 및 세대 별로 계산한 결과임.

2. 정당의 현안 입장 인식

정치 이념은 정치 현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틀이다. 정치 이념의 결정 요인은 유전자, 성격, 교육수준, 소득수준, 거주 지역, 성별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요인 등이 있으나, 이 중 어떤 것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밝혀진 바 없다. 다만 정치 이념의 구성에 대한 논의는 고려할 만하다. 흔히 한 유권자 개인의 정치 이념은 “진보-보수”라는 일차원적 스펙트럼을 놓고 스스로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정하게 하여 확인한다. 이 때 그 유권자가 어떤 기준으로 자신의 이념 위치를 정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그 유권자가 자신이 관심을 갖는 정치 현안들에 대한 입장을 진보-보수로 정리하고, 그 입장을 종합하여 대답을 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추론은 가능하다. 이러한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많은 기존 연구들은 다양한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묻고, 그 정보를 종합하여 설문 응답자의 이념 성향을 추정하기도 하였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전통에 따라,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기준으로 설문 응답자들이 정당의 이념 위치를 어떻게 파악하는지를 살펴본다.

현실정치에는 엄청난 수의 현안들이 논의되기 때문에, 일부 정치 현안들을 취사선택하여 분석을 수행할 수 밖에 없다. 여기서는 정치, 경제, 사회 영역 별로 두 개의 현안을 선정하였다. 그리고는 아래와 같이 한 현안 별로 두 개의 상충되는 진술을 제시하고, 응답자 본인의 의견(그리고 각 정당의 입장)이 그 중 어느 진술에 가까운지를 5점 척도를 사용하여 보고하게 하였다. 그리고 높은 값이 보다 보수적인 입장이 되도록 일부 문항의 응답은 분석을 위해 역코딩을 하였다. 이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은 <표 4-1>에 정리되어 있다.

정치현안 1:

- [가] 정부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변수값=1)
- [나] 북한 정권의 붕괴를 이끌어내기 위해 모든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변수값=5)

정치현안 2 (역코딩):

- [가]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은 미국 주도의 질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변수값=1)
- [나] 미국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독자적 외교노선을 취해야 한다 (변수값=5)

<표 4-1> 정당의 현안 입장 인식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치 1	2.04	1.13	정치 1	3.89	1.09
정치 2	2.83	1.24	정치 2	3.69	1.21
경제 1	2.06	1.09	경제 1	3.68	1.26
경제 2	2.32	1.15	경제 2	3.78	1.14
사회 1	2.45	1.04	사회 1	3.50	1.14
사회 2	3.76	1.11	사회 2	2.78	1.29
정의당			국민의당		
정치 1	2.49	1.12	정치 1	3.43	1.09
정치 2	2.48	1.09	정치 2	3.36	1.07
경제 1	2.47	1.13	경제 1	3.38	1.08
경제 2	2.35	1.15	경제 2	3.38	1.04
사회 1	2.22	1.16	사회 1	3.16	1.01
사회 2	3.34	1.19	사회 2	2.94	1.08
열린민주당			주: 6개 현안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 인식 (최솟값=1; 최댓값=5). 값이 클수록 보수적인 입장을 반영함.		
정치 1	2.34	1.12			
정치 2	2.77	1.11			
경제 1	2.37	1.07			
경제 2	2.53	1.08			
사회 1	2.57	1.03			
사회 2	3.56	1.08			

경제현안 1:

- [가]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여 집값 하락을 유도해야 한다 (변수값=1)
- [나] 부동산 문제는 시장에 자율적으로 맡겨야 한다 (변수값=5)

경제현안 2 (역코딩):

- [가] 불필요한 복지예산을 줄이고 경제성장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변수값=1)
- [나] 경제성장이 둔화되더라도 복지예산을 더욱 늘려야 한다 (변수값=5)

사회현안 1:

- [가] 성적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변수값=1)

[나] 가족 및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해악이므로 동성애를 절대 용인해서는 안 된다 (변수값=5)

사회현안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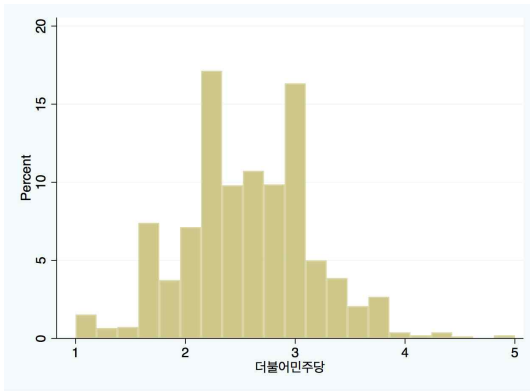
[가] 인터넷이나 미디어가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형사처벌을 도입하여 강력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변수값=1)

[나]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며 언론에 대한 어떤 규제 시도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변수값=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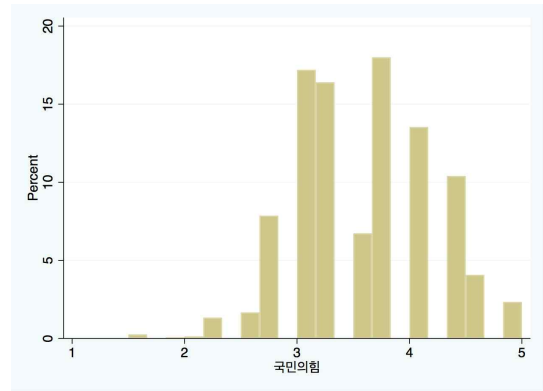
<표 4-1>에 담긴 정보를 활용하여, 여섯 개 정책 영역의 정당별 위치를 평균 내어 하나의 지표를 만들었다. 그 결과는 <그림 4-5>에 담았다. 원 변수들이 1(진보 입장)과 5(보수 입장)를 각각 최솟값과 최댓값이 되도록 코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만든 변수 역시 높은 값을 가질수록 보수적인 입장을 의미한다.

<그림 4-5>에 제시된 결과를 보면, <그림 4-1>에서 확인한 정당의 이념 위치 인식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지만, 차이점 역시 확연함을 알 수 있다. 여섯 개의 현안에 대한 입장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정당의 이념 위치는 더불어민주당이 진보, 국민의힘이 보수인 경향을 보이며, 열린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국민의힘과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정의당의 이념 위치가 다른 정당에 비해 가장 진보적인 점 역시 앞의 결과와 유사하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그림 4-1>의 결과에 비해 <그림 4-5>에 제시된 결과는 국민의힘과 정의당의 이념 편향성이 상대적으로 덜 두드러지게 보인다. 아마도 <그림 4-5>의 결과가 기반하고 있는, 임의로 선정된 여섯 개의 정치 현안 말고 다른 현안들을 활용하였으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 한편 <그림 4-1>의 결과가 기반을 두고 있는 일차원적 진보-보수 설문 문항이 실제 현안들에 대한 입장에 기반한 방법보다 정당의 이념 위치를 과장하여 보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 결과의 차이가 정확하게 어떤 이유에서 비롯되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전체적인 패턴이 서로 유사하다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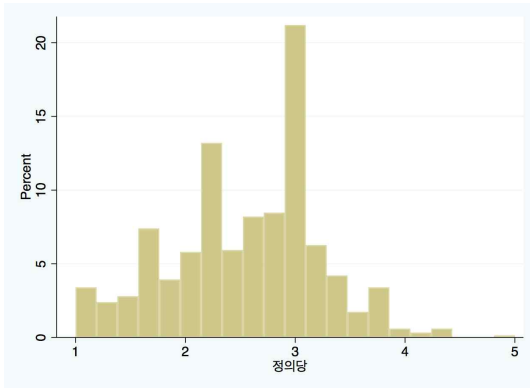
<그림 4-5> 정당의 현안 입장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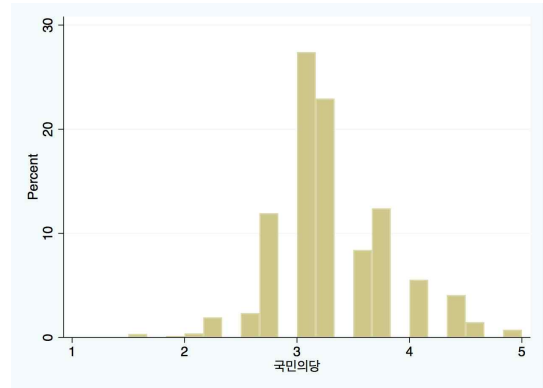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
(평균=2.58; 표준편차=0.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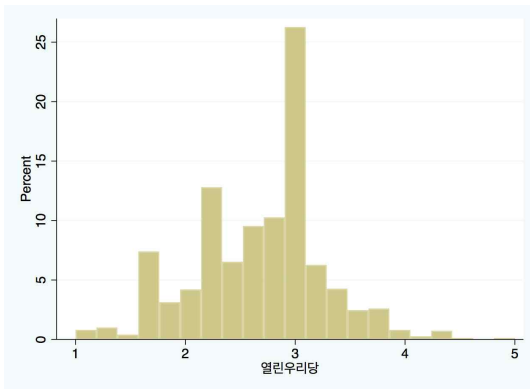
국민의힘
(평균=3.55; 표준편차=0.61)



정의당
(평균=2.56; 표준편차=0.68)



국민의당
(평균=3.28; 표준편차=0.51)



열린민주당
(평균=2.69; 표준편차=0.59)

주: 설문 응답자가 인식한 각 정당의 여섯 개 현안에 대한 입장 종합한 지표 (1=진보; 5=보수)

다음으로 <그림4-3>에 포함된 정보와 유사한 결과를 얻기 위한 작업을 수행하였다. 우선 각 설문 응답자가 앞에 제시된 여섯 가지 현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를 확인한 후, 그것을 평균을 구해 하나의 변수를 만들었다. 그

후 각 설문 응답자가 생각하는 각 정당의 여섯 가지 현안에 대한 입장 인식의 평균을 구해 또 하나의 변수를 만들어, 응답자 본인의 입장과 차이를 계산하였다. 이 과정은 아래의 공식으로 요약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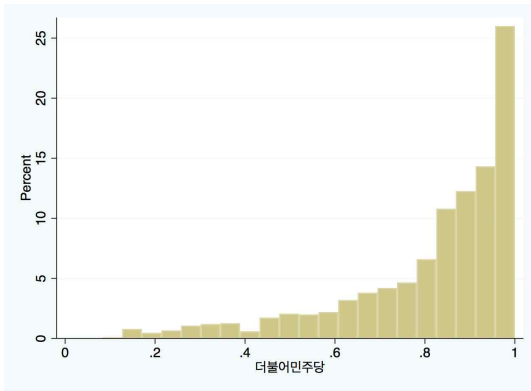
특정 정당과의 현안에 대한 입장 일치 정도

$$= 1 - |(응답자 본인 현안 입장 [여섯 개 현안 평균] - 특정 정당의 현안 입장 [여섯 개 현안 평균])/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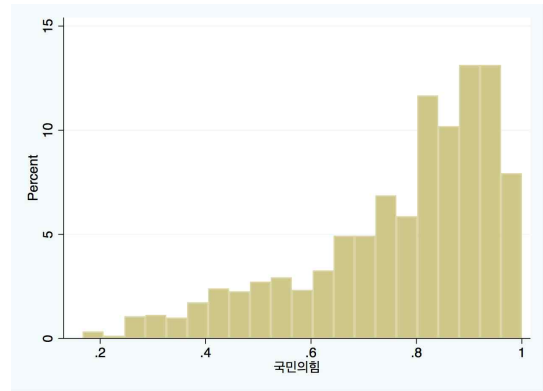
최종적으로 얻은 변수값은 0에서 1사이의 범위를 갖게 되고, 큰 값일수록 응답자 개인과 특정 정당 간 현안에 대한 입장 일치 정도가 크음을 의미한다. 이 결과를 <그림 4-6>에 정리하였다. 이 결과는 <그림4-3>의 결과와 유사하다. 진보 성향의 정당인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의 경우 약 25%의 응답자가 정확히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공유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보수 성향의 정당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경우 그 비율이 15%도 채 못 미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자가보고 이념 기준 뿐만 아니라, 현안에 대한 입장 기준으로 볼 때도, 국민의힘은 일반 유권자의 평균적인 입장과 상대적으로 먼 위치에 놓여있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그림 4-6>에 제시된 결과를 세대와 성별 기준으로 나누어 본 결과가 <그림 4-7>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그림 4-4>에서 본 결과와 유사하나, 세대/성별 간 차이의 정도가 덜 극적이다. 그러나 2030세대 남성들이 60대 응답자들처럼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정의당과 현안 입장 일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국민의힘 및 국민의당과는 현안 입장 일치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과 세대를 막론하고 여성 응답자들이 남성 응답자들보다 정의당과 현안 입장 일치도가 높다는 점은 앞의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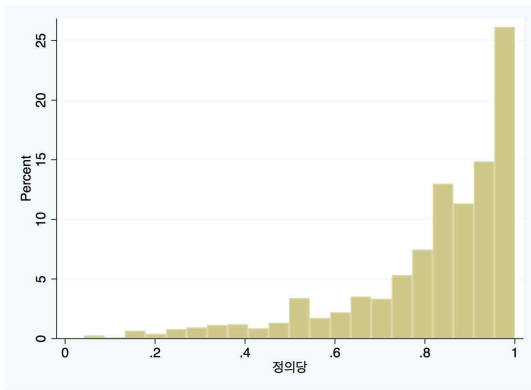
<그림 4-6> 정당과의 현안에 대한 입장 일치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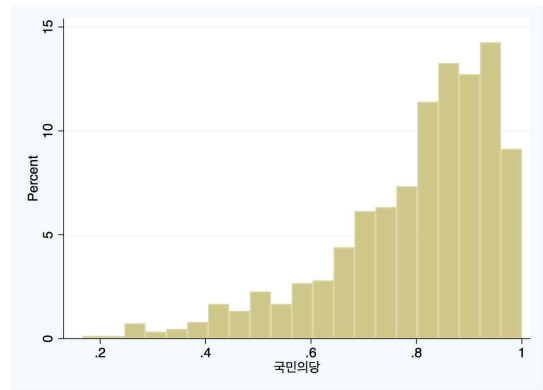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
(평균=0.80; 표준편차=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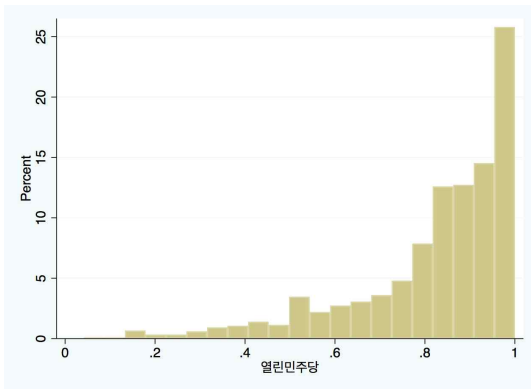
국민의힘
(평균=0.78; 표준편차=0.19)



정의당
(평균=0.81; 표준편차=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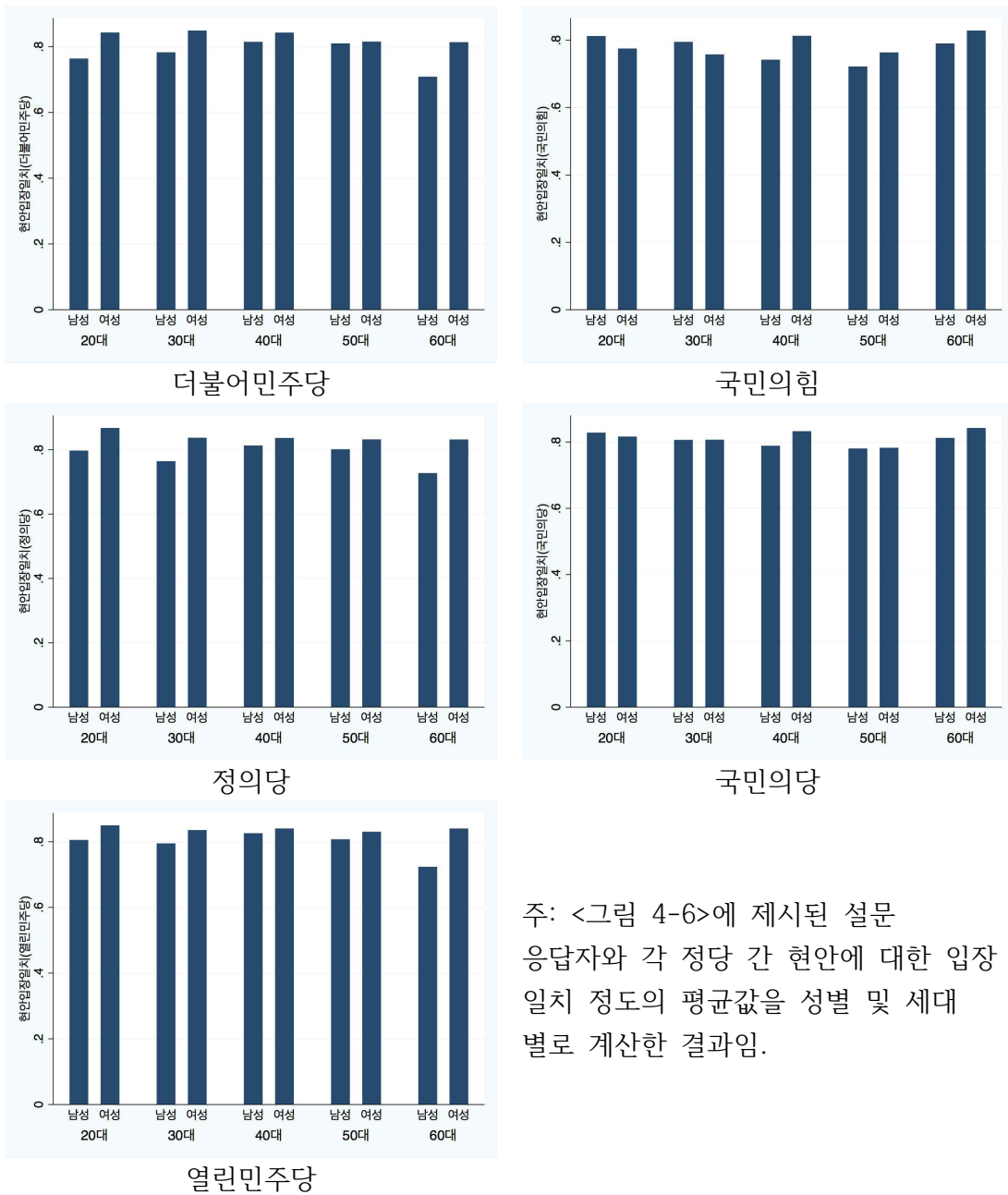
국민의당
(평균=0.81; 표준편차=0.16)



열린민주당
(평균=0.82; 표준편차=0.17)

주: 6개 현안에 대한 응답자 본인의
입장의 평균과 응답자가 생각하는 각
정당 입장의 평균 간 차이 (0=입장 완전
불일치; 1=입장 완전 일치)

<그림 4-7> 정당과의 현안에 대한 입장 일치 정도: 세대 및 성별 기준 (%)



주: <그림 4-6>에 제시된 설문 응답자와 각 정당 간 현안에 대한 입장 일치 정도의 평균값을 성별 및 세대 별로 계산한 결과임.

요약하자면 단일 설문 문항으로 이루어진 일차원적 진보-보수 이념 위치를 분석한 이 장의 1절에서 제시한 결과와 유사한 결과가 여러 현안에 대한 입장을 비교하였을 때에도 확인되었다. 여섯 가지 현안들에 대한 입장을 종합해 보았을 때, 응답자들은 주요 정당들 중에서 국민의힘을 가장 보수적인 정당, 정의당을 가장 진보적인 정당을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당은 상대적으로

온건한 보수,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온건한 진보를 대변하고 있다고 여긴다. 응답자의 이념 위치와의 상대적 거리를 측정해 본 결과, 국민의힘이 보수적인 방향으로 치우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것보다 약간 약한 정도로 정의당이 진보적인 방향으로 치우쳐 있음을 확인하였다. 설문 응답자의 이념 위치와 각 정당의 이념 위치 간 일치 정도를 세대와 성별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2030세대 남성의 보수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2절에 포함된 결과가 1절에 제시된 결과만큼 확연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음을 주목해야 한다. 그 이유가 선정된 현안들의 성격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설문 조사 상의 차이 때문인지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었다.

3. 정당 이념 위치 인식의 결정 요인: 회귀분석

이 절에서는 앞에서 확인한 (1) 정당 이념 위치 인식, (2) 응답자 본인과 정당과의 이념 일치 정도, (3) 정당의 현안 입장 인식, 그리고 (4) 응답자 본인과 정당과의 현안에 대한 입장 일치 정도의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제시한다. 사용하는 모든 종속변수가 연속형 변수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분석 방법은 OLS를 사용하였다.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은 정당일체감 더미(기준범주: 무당파), 정치 지식, 정치 관심, 연령, 성별, 교육수준, 소득수준, 직업 더미(기준범주: 무직), 그리고 17개 광역시도 더미이다. 이 중에서 3장에서 심도 깊게 검토한 정당일체감 변수의 통계적, 실질적 유의미성 여부에 특히 관심을 갖는다.

우선 <표 4-2>는 정당 이념 위치 인식의 결정 요인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모형 1]을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가 무당파에 비해 더불어민주당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진보 성향이라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b = -1.09$, $se = 0.18$, $p < 0.01$). 반면 정의당 지지자는 무당파에 비해 더불어민주당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보수 성향이라고 생각한다 ($b = 0.87$, $se = 0.24$, $p < 0.01$). 반면, [모형 2]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가 무당파에 비해 국민의힘을 보수 성향이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b = 1.05$, $se = 0.16$, $p < 0.01$), 국민의힘 지지자도 무당파에 비해 자신이 지지하는 국민의힘을 보수 성향이라고 파악함을 보여준다 ($b = 0.38$, $se = 0.18$, $p < 0.05$). 정의당 지지자 역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처럼 무당파에 비해 국민의힘을 보수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나 회귀계수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그 정도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b = 1.05$)에게서 정의당 지지자($b = 0.88$)보다 크다.

<표 4-2> 정당 이념 위치 인식

	(1) 더불어민주당	(2) 국민의힘	(3) 정의당	(4) 국민의당	(5) 열린민주당
더불어민주당	-0.25 (0.16)	1.05** (0.16)	0.07 (0.15)	0.90** (0.15)	0.06 (0.15)
국민의힘	-1.09** (0.18)	0.38* (0.18)	-0.66** (0.17)	-0.59** (0.17)	-0.87** (0.16)
정의당	0.87** (0.24)	0.88** (0.25)	-0.57* (0.23)	0.82** (0.22)	1.19** (0.22)
기타 정당	0.09 (0.28)	0.51 (0.29)	0.37 (0.27)	0.55* (0.26)	-0.40 (0.26)
정치지식	-0.04 (0.04)	0.21** (0.04)	-0.16** (0.04)	0.11** (0.03)	-0.14** (0.03)
정치관심	-0.29** (0.09)	0.29** (0.09)	-0.20* (0.09)	0.12 (0.08)	-0.19* (0.08)
연령	-0.01 (0.00)	-0.01 (0.00)	-0.01* (0.00)	0.01 (0.00)	-0.02** (0.00)
교육수준	0.10 (0.13)	0.70** (0.14)	-0.35** (0.13)	0.65** (0.12)	-0.09 (0.12)
소득수준	0.02 (0.02)	0.03 (0.02)	-0.04 (0.02)	0.01 (0.02)	0.00 (0.02)
정규직	0.18 (0.14)	0.04 (0.14)	0.31* (0.13)	0.17 (0.13)	0.29* (0.13)
비정규직	0.28 (0.22)	0.01 (0.22)	0.23 (0.21)	0.24 (0.20)	0.39* (0.20)
자영업	-0.16 (0.22)	0.29 (0.22)	0.05 (0.21)	0.17 (0.20)	0.12 (0.20)
여성	-0.06 (0.12)	-0.14 (0.13)	0.26* (0.12)	-0.17 (0.12)	0.23* (0.11)
절편	4.60** (0.36)	4.90** (0.37)	4.94** (0.35)	4.20** (0.34)	5.13** (0.34)
조정된 Rsq	0.08	0.13	0.10	0.13	0.12
응답자 수	1,500	1,500	1,500	1,500	1,500

주: OLS 회귀분석 결과. 17개 광역시도 더미가 분석에 포함되었으나 보고하지 않음.

* $p < 0.05$, ** $p < 0.01$ (양측검정)

가장 흥미로운 결과는 [모형 4]에서 확인된다. 무당파와 비교해 보았을 때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정의당 지지자, 그리고 기타 정당 지지자는 국민의당이 보수 성향의 정당이라고 인식하는 반면, 유독 국민의힘 지지자는 국민의당을

진보 성향의 정당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정의당 지지자는 무당파에 비해, 자신의 정당인 정의당을 진보정당, 나머지 정당을 보수 정당이라고 규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는 무당파에 비해, 자신의 정당인 국민의힘을 보수정당, 나머지 정당을 모두 진보 정당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표 4-3> 정당과의 이념 일치 정도

	(1) 더불어민주당	(2) 국민의힘	(3) 정의당	(4) 국민의당	(5) 열린민주당
더불어민주당	0.10** (0.01)	-0.19** (0.02)	0.04** (0.01)	-0.15** (0.01)	0.07** (0.01)
국민의힘	-0.22** (0.02)	0.12** (0.02)	-0.18** (0.02)	0.01 (0.02)	-0.20** (0.02)
정의당	0.02 (0.02)	-0.16** (0.02)	0.09** (0.02)	-0.15** (0.02)	0.01 (0.02)
기타 정당	-0.03 (0.03)	-0.12** (0.03)	-0.01 (0.02)	-0.10** (0.03)	-0.01 (0.03)
정치지식	-0.00 (0.00)	-0.01** (0.00)	-0.01** (0.00)	-0.01 (0.00)	-0.01** (0.00)
정치관심	-0.04** (0.01)	-0.04** (0.01)	-0.03** (0.01)	-0.03** (0.01)	-0.03** (0.01)
연령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교육수준	-0.01 (0.01)	-0.02 (0.01)	-0.03** (0.01)	-0.01 (0.01)	-0.01 (0.01)
소득수준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정규직	0.02* (0.01)	-0.01 (0.01)	0.01 (0.01)	0.00 (0.01)	0.02 (0.01)
비정규직	0.01 (0.02)	0.01 (0.02)	0.00 (0.02)	0.00 (0.02)	0.02 (0.02)
자영업	0.03 (0.02)	-0.03 (0.02)	-0.00 (0.02)	-0.01 (0.02)	0.02 (0.02)
여성	-0.00 (0.01)	-0.02 (0.01)	0.04** (0.01)	-0.01 (0.01)	0.01 (0.01)
절편	0.83** (0.03)	0.90** (0.04)	0.92** (0.03)	0.93** (0.03)	0.86** (0.03)
조정된 Rsq	0.29	0.29	0.25	0.15	0.25
응답자 수	1,500	1,500	1,500	1,500	1,500

주: OLS 회귀분석 결과. 17개 광역시도 더미가 분석에 포함되었으나 보고하지 않음.

* p < 0.05, ** p < 0.01 (양측검정)

<표 4-3>은 설문 응답자와 각 정당 간의 이념 일치 정도의 결정 요인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우선 지지 정당이 있는 응답자는 무당파에 비해 자신의 정당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이념 위치를 일치시키는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경우, 더불어민주당($b = 0.10, se = 0.01, p < 0.01$), 정의당($b = 0.04, se = 0.01, p < 0.01$), 열린민주당($b = 0.07, se = 0.01, p < 0.01$)에 이념 위치를 일치시키는 경향이 있는 반면, 국민의힘($b = -0.19, se = 0.02, p < 0.01$)과 국민의당($b = -0.15, se = 0.01, p < 0.01$)과는 이념 차이를 보인다. 한편 국민의힘 지지자는 국민의힘($b = 0.12, se = 0.02, p < 0.01$)에게만 이념 위치를 일치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다른 정당인 더불어민주당($b = -0.22, se = 0.02, p < 0.01$), 정의당($b = -0.18, se = 0.02, p < 0.01$), 열린민주당($b = -0.20, se = 0.02, p < 0.01$)과는 이념 차이를 보인다. 국민의힘 지지자의 국민의당에 대한 이념 일치도는 무당파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정의당 지지자는 자신의 정당인 정의당($b = 0.09, se = 0.02, p < 0.01$)에게만 이념적으로 일치하는 경향을 보일 뿐, 국민의힘($b = -0.16, se = 0.02, p < 0.01$)과 국민의당($b = -0.15, se = 0.02, p < 0.01$)으로부터는 이념적으로 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국민의힘과 정의당 지지자는 자신의 정당에 대한 이념적 거리감이 상대적으로 가까운 동시에 다른 정당으로부터의 거리가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자신의 정당뿐만 아니라 정의당과 열린민주당과도 이념적 친화성을 보임을 알 수 있다.

<표 4-4>는 여섯 가지 현안에 대한 정당의 입장을 기준으로 하여 정당의 이념 인식을 결정하는 요인을 검토한 결과를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무당파에 비해 국민의힘($b = 0.08, se = 0.04, p < 0.05$)과 국민의당($b = 0.10, se = 0.04, p < 0.01$)의 현안에 대한 입장이 보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는 무당파에 비해 더불어민주당($b = -0.21, se = 0.04, p < 0.01$)과 열린민주당($b = -0.16, se = 0.04, p < 0.01$)의 현안에 대한 입장이 진보적이라고 파악하는 경향을 보인다. 흥미롭게도 정의당 지지자는 무당파에 비해 정의당($b = -0.15, se = 0.07, p < 0.05$)의 현안에 대한 입장이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다른 모든 정당의 현안에 대한 입장은 보수적이라고 판단하는 경향을 보인다.

<표 4-4> 정당의 현안 입장 인식

	(1)	(2)	(3)	(4)	(5)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더불어민주당	0.05 (0.04)	0.08* (0.04)	-0.06 (0.04)	0.10** (0.04)	0.02 (0.04)
국민의힘	-0.21** (0.04)	0.06 (0.05)	-0.10 (0.05)	0.03 (0.04)	-0.16** (0.04)
정의당	0.21** (0.06)	0.17** (0.06)	-0.15* (0.07)	0.12* (0.05)	0.15* (0.06)
기타 정당	0.04 (0.07)	0.01 (0.07)	-0.06 (0.08)	0.15* (0.06)	-0.10 (0.07)
정치지식	-0.04** (0.01)	0.07** (0.01)	-0.07** (0.01)	0.04** (0.01)	-0.05** (0.01)
정치관심	-0.05* (0.02)	0.04 (0.02)	-0.07** (0.03)	0.00 (0.02)	-0.03 (0.02)
연령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교육수준	-0.17** (0.03)	0.14** (0.03)	-0.23** (0.04)	0.12** (0.03)	-0.13** (0.03)
소득수준	-0.01* (0.01)	0.01 (0.01)	-0.02** (0.01)	0.00 (0.01)	-0.02** (0.01)
정규직	0.11** (0.03)	-0.02 (0.04)	0.05 (0.04)	-0.01 (0.03)	0.07 (0.03)
비정규직	0.09 (0.05)	-0.09 (0.06)	0.04 (0.06)	-0.06 (0.05)	0.09 (0.05)
자영업	0.04 (0.05)	0.06 (0.06)	-0.02 (0.06)	-0.05 (0.05)	0.01 (0.05)
여성	0.07* (0.03)	-0.08* (0.03)	0.08* (0.03)	-0.01 (0.03)	0.10** (0.03)
절편	3.04** (0.09)	3.07** (0.09)	3.40** (0.10)	2.93** (0.08)	3.25** (0.09)
조정된 Rsq	0.13	0.12	0.16	0.06	0.13
응답자 수	1,500	1,500	1,500	1,500	1,500

주: OLS 회귀분석 결과. 17개 광역시도 더미가 분석에 포함되었으나 보고하지 않음.

* $p < 0.05$, ** $p < 0.01$ (양측검정)

<표 4-5>는 응답자 개인과 정당과의 현안에 대한 입장의 일치 정도가 어떤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역시 이 경우에도 정당일체감의 영향력이 돋보인다.

<표 4-5> 정당과의 현안에 대한 입장 일치 정도

	(1) 더불어민주당	(2) 국민의힘	(3) 정의당	(4) 국민의당	(5) 열린민주당
더불어민주당	0.06** (0.01)	-0.10** (0.01)	0.05** (0.01)	-0.07** (0.01)	0.04** (0.01)
국민의힘	-0.14** (0.01)	0.06** (0.01)	-0.12** (0.01)	0.01 (0.01)	-0.12** (0.01)
정의당	0.03 (0.02)	-0.12** (0.02)	0.06** (0.02)	-0.07** (0.02)	0.01 (0.02)
기타 정당	-0.00 (0.02)	-0.08** (0.02)	0.02 (0.02)	-0.09** (0.02)	0.01 (0.02)
정치지식	-0.01** (0.00)	-0.02** (0.00)	-0.01** (0.00)	-0.01** (0.00)	-0.01** (0.00)
정치관심	-0.02** (0.01)	-0.02** (0.01)	-0.03** (0.01)	-0.02** (0.01)	-0.02** (0.01)
연령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교육수준	-0.02* (0.01)	-0.04** (0.01)	-0.04** (0.01)	-0.04** (0.01)	-0.03** (0.01)
소득수준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정규직	0.03**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비정규직	0.03 (0.02)	-0.00 (0.02)	0.02 (0.02)	0.02 (0.01)	0.02 (0.02)
자영업	0.01 (0.02)	-0.02 (0.02)	-0.00 (0.02)	-0.01 (0.01)	0.00 (0.02)
여성	0.03** (0.01)	-0.00 (0.01)	0.03** (0.01)	-0.01 (0.01)	0.02* (0.01)
절편	0.92** (0.03)	0.96** (0.03)	0.97** (0.03)	0.96** (0.03)	0.95** (0.03)
조정된 Rsq	0.24	0.21	0.22	0.13	0.20
응답자 수	1,500	1,500	1,500	1,500	1,500

주: OLS 회귀분석 결과. 17개 광역 시도 더미가 분석에 포함되었으나 보고하지 않음. * $p < 0.05$, ** $p < 0.01$ (양측검정)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자신의 지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b = 0.06$, $se = 0.01$, $p < 0.01$) 뿐만 아니라 정의당($b = 0.05$, $se = 0.01$, $p < 0.01$)과 열린 민주당($b = 0.04$, $se = 0.01$, $p < 0.01$)과도 현안에 대한 입장이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b = -0.10$, $se = 0.01$, $p < 0.01$)과 국민의당($b = -0.07$, $se = 0.01$, $p < 0.01$)과는 현안에 대한 입장이 상충하는 경향을 보인다.

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무당파와 비교해 볼 때, 자신의 지지 정당인 국민의힘 ($b = 0.06$, $se = 0.01$, $p < 0.01$)과 현안에 대한 입장이 일치하지만 다른 정당과는 입장이 배치된다. 정의당 지지자의 성향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성향과 유사하다. 자신의 지지 정당인 정의당($b = 0.06$, $se = 0.02$, $p < 0.01$)과 현안에 대한 입장이 일치하는 반면, 보수계 정당인 국민의힘($b = -0.12$, $se = 0.02$, $p < 0.01$)과 국민의당($b = -0.07$, $se = 0.02$, $p < 0.01$)과는 현안에 대한 입장이 사뭇 다르다.

이 절에서는 앞에서 확인한 (1) 정당 이념 위치 인식, (2) 응답자 본인과 정당과의 이념 일치 정도, (3) 정당의 현안 입장 인식, 그리고 (4) 응답자 본인과 정당과의 현안에 대한 입장 일치 정도의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응답자의 정당일체감에 따라 정당의 이념 위치를 파악하는 내용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무당파에 비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을 보수 정당으로 취급하는 반면, 자신의 지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그리고 정의당을 진보 정당으로 취급하는 경향을 보인다. 국민의힘 지지자에게서는 이와 상반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정의당 지지자가 무당파에 비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보수 정당으로 취급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향성은 정치 이념을 측정하기 위해 단일 설문 문항을 사용했을 때나 정치 현안에 대한 태도의 평균값을 사용했을 때 모두 큰 차이 없이 확인된다.

4. 소결

이 장에서는 한국의 유권자들이 21대 국회에서 최소 3석 이상을 보유한 주요 정당의 이념 위치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작업을 수행하였다. 첫째, 진보-보수라는 일차원적 기준을 적용하여 각 정당의 이념 위치를 확인한 후, 설문 응답자 본인의 이념 위치와 각 정당의 이념 위치 간의 거리를 계산하여 각 정당과의 이념 일치 정도를 파악하고, 그 결정 요인에 대해 검토하였다. 둘째, 같은 내용의 분석을 세 개 영역(정치, 경제, 사회), 여섯 개의 현안에 대한 응답자 본인의 입장과 응답자가 생각하는 각 정당의 입장을 보고한 정보를 활용하여 수행하였다.

자가보고된, 일차원적 진보-보수 정치 이념을 활용한 설문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 유권자는 주요 정당들 중에서 국민의힘을 가장 보수적인 정당, 정의당을 가장 진보적인 정당을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민의당은 상대적으로 온건한 보수,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온건한 진보를 대변하고 있다고 여긴다. 응답자의 이념 위치와의 상대적 거리를 측정해 본 결과, 국민의힘이 보수적인 방향으로 치우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것보다 약간 약한 정도로 정의당이 진보적인 방향으로 치우쳐 있음을 확인하였다. 설문 응답자의 이념 위치와 각 정당의 이념 위치 간 일치 정도를 세대와 성별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2030세대 남성의 보수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구체적인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파악한 설문 자료를 분석하였을 때 재확인되었다. 여섯 가지 현안들에 대한 입장을 종합해 보았을 때, 응답자들은 주요 정당들 중에서 국민의힘을 가장 보수적인 정당, 정의당을 가장 진보적인 정당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국민의당은 상대적으로 온건한 보수,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온건한 진보를 대변하고 있다고 여긴다. 응답자의 이념 위치와의 상대적 거리를 측정해 본 결과, 국민의힘이 보수적인 방향으로 치우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것보다 약간 약한 정도로 정의당이 진보적인 방향으로 치우쳐 있음을 확인하였다. 설문 응답자의 이념 위치와 각 정당의 이념 위치 간 일치 정도를 세대와 성별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2030세대 남성의 보수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V. 결론: 총정리와 정책선거 추진 방향

이 장에서는 한국 유권자의 정당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종합 정리한 후,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선거민주주의의 핵심 과제인 정책 선거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설문조사 분석 결과 총정리

이 연구는 2가지 점에 초점을 맞추었는바, 한국 유권자의 정당일체감(*party identification*)과 정당이념 인식을 분석하였다. 정당일체감은 선거행태와 정당 정치를 설명하는 핵심변수이지만 한국 유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당일체감의 성격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인 연구가 없다. 이 연구는 이러한 학문적 공백을 메우게 된 것이다. 한편 민주화이후 한국 정당의 이념 분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보수-진보간의 이념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이념 갈등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한국 정당과 유권자의 이념지형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었다.

1) 한국 유권자의 정당일체감

한국 유권자들의 정당일체감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 한국 유권자들은 도구적 당파심(*instrumental partisanship*)보다 정서적 당파심(*expressive partisanship*)이 강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구적 당파심은 이념 성향 및 정책선호에 기반을 둔 정당일체감이고, 정서적 당파심은 사회적 정체성(*social identity*)에 기반을 둔 정당일체감이다. 따라서 한국 유권자들은 특정정당과 이념성향이나 정책선호가 비슷해서 일체감을 느끼기보다, 정당을 자신의 정체성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다. 결국 한국 유권자들이 특정한 정당에 대해 느끼는 일체감이 구체적인 이해관계와는 상당히 무관하게 이루어져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출렁이는 정당 지지도의 변화와는 별도로 한국 유권자의 정당일체감은 자신의 정체성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서 쉽게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 정서적 당파심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7개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7개 진술 중 4개 진술에 대해 과반수의 응답자가 동의하였다. 절반 이상의 응답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일체감을 느끼는 정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신경이 쓰이며,” “자신과 동일한 정당을 지지하는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며,” “같은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을 만나면 왠지 친근한 느낌이 들고,” “다른 사람들이 지지하는 정당에 대해 좋게 이야기하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대답했다. 나머지 3개 진술 중 2개(“다른 사람들이 지지하는 정당에 대해 안 좋게 이야기하면 내가 공격받는 느낌이 든다”와 “지지하는 정당의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여론조사결과를 접하면 우울한 기분이 든다”)에 대해서도 절반에 가까운 46%와 48%의 응답자들이 동의를 표시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 그것은 “나는 [정당]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 정당’이라고 1인칭으로 표현하곤 한다”는 진술에 동의한 응답자는 23.56%로 가장 낮다. 한국 유권자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대해 ‘우리 의식(we-feeling)’이 매우 약한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한국 정당은 중앙당 보스나 엘리트 위주로 운영되고, 이들만의 합의로 이합집산과 당명 변경을 자주하는 바람에 일반 유권자들이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한국 정당이 아직 명실상부한 대중정당(mass party)이 되지 못하고 명사정당에 머물러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그런데 유권자 개개인이 정당일체감을 사회적 정체성으로 받아들이는 정도는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살펴보기 위해서 다양한 사회경제적(성별, 연령, 지역)·정치적(일체감을 느끼는 정당, 이념성향, 정치관심도와 정치지식 수준) 특징에 따라 정당일체감을 사회적 정체성으로 받아들이는 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성별, 지역, 일체감을 느끼는 정당의 경우 사회적 정체성을 정당일체감으로 받아들이는 정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연령, 이념성향, 정치관심과 정치지식 수준의 경우 차이가 있었다. 첫째, 연령이 높아질수록 정당일체감을 사회적 정체성으로 받아들이는 정도가 증가하였다. 나이 많은 유권자들은 젊은 유권자에 비해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대한 정서적 애착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이념성향이 중도적인 사람들은 정당일체감을 사회적 정체성으로 받아들이는 정도가 약하며, 이념성향이 극단적일수록 정당일체감을 사회적 정체성으로 받아들이는 정도가 강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념성향의 강도가 정서적 당파심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관여도(정치관심도+정치지식 수준)가 높은 응답자일수록 특정 정당에 대해 느끼는 일체감을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정도가 강해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다시 말해서 당파적 정체성은 정치에 높은 관심과 지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유권자들 사이에서 오히려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당파적 양극화를 추동하는 유권자 집단이 다름 아닌 정치적 관여도가 높은 유권자들이라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2) 한국 유권자의 정당 이념 인식

한국 유권자의 정당이념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2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 번째 방법은 진보-보수라는 1차원적 기준을 적용하여 각 정당의 이념위치를 확인한 후, 유권자 본인의 이념위치와 각 정당의 이념 위치간의 거리를 계산하여 각 정당과의 이념 일치 정도를 파악하고, 그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두 번째 방법은 3개 영역(정치, 경제, 사회) 6개 현안에 대한 유권자 본인의 입장과 유권자가 생각하는 각 정당의 입장을 보고한 정보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진보-보수라는 기준에 따라 한국 정당과 유권자의 이념 지형을 분석한 결과, 한국 유권자들은 주요 정당들 중에서 국민의힘을 가장 보수적인 정당, 정의당을 가장 진보적인 정당을 인식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상대적으로 온건한 보수,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온건한 진보를 대변하고 있다고 여긴다. 유권자의 이념 위치와의 상대적 거리를 측정해 본 결과, 국민의힘이 보수적인 방향으로 치우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것보다 약간 약한 정도로 정의당이 진보적인 방향으로 치우쳐 있음을 확인하였다. 유권자의 이념 위치와 각 정당의 이념 위치간 일치 정도를 세대와 성별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2030세대 남성의 보수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구체적인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 기준으로 한국 유권자의 정당이념 인식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진보-보수 기준의 정당 이념 인식 분석 결과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유권자들은 주요 정당들 중에서 국민의힘을 가

장 보수적인 정당, 정의당을 가장 진보적인 정당을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당은 상대적으로 온건한 보수,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온건한 진보를 대변하고 있다고 여긴다. 한편 유권자의 이념 위치와의 상대적 거리를 측정해 본 결과, 국민의힘이 보수적인 방향으로 치우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것보다 약간 약한 정도로 정의당이 진보적인 방향으로 치우쳐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유권자의 이념 위치와 각 정당의 이념 위치간 일치 정도를 세대와 성별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2030세대 남성의 보수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1) 정당 이념 위치 인식, (2) 유권자 본인과 정당과의 이념 일치 정도, (3) 정당의 현안 입장 인식, 그리고 (4) 유권자 본인과 정당과의 현안에 대한 입장 일치 정도의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자가 무당파에 비해 더불어민주당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진보 성향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반면 정의당 지지자는 무당파에 비해 더불어민주당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보수 성향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자가 무당파에 비해 국민의힘을 보수 성향이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자도 무당파에 비해 자신이 지지하는 국민의힘을 보수 성향이라고 파악함을 보여준다. 정의당 지지자 역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처럼 무당파에 비해 국민의힘을 보수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그 정도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가 정의당 지지자보다 더 크다.

그런데 무당파와 비교해 보았을 때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정의당 지지자, 그리고 기타 정당 지지자는 국민의당이 보수 성향의 정당이라고 인식하는 반면, 유독 국민의힘 지지자는 국민의당을 진보 성향의 정당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정의당 지지자는 무당파에 비해, 자신의 정당인 정의당을 진보정당, 나머지 정당을 보수 정당이라고 규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는 무당파에 비해, 자신의 정당인 국민의힘을 보수정당, 나머지 정당을 모두 진보 정당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유권자와 각 정당 간의 이념 일치 정도의 결정 요인을 분석해 보면, 국민의힘과 정의당 지지자는 자신의 정당에 대한 이념적 거리감이 상대적으로 가까운 동시에 다른 정당으로부터의 거리가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자신의 정당 뿐만 아니라 정의당과 열린민주당과도 이념적 친화성을 보여 주

었다.

한편 여섯 가지 현안에 대한 정당의 입장을 기준으로 하여 유권자의 정당 이념 인식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무당파에 비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현안에 대한 입장이 보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는 무당파에 비해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현안에 대한 입장이 진보적이라고 파악하는 경향을 보인다. 흥미롭게도 정의당 지지자는 무당파에 비해 정의당의 현안에 대한 입장이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다른 모든 정당의 현안에 대한 입장은 보수적이라고 판단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제 유권자 개인과 정당간의 현안에 대한 입장의 일치 정도가 어떤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분석한 결과, 정당일체감의 영향력이 돋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자신의 지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정의당과 열린민주당과도 현안에 대한 입장이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과는 현안에 대한 입장이 상충하는 경향을 보인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무당파와 비교해 볼 때, 자신의 지지 정당인 국민의힘과 현안에 대한 입장이 일치하지만 다른 정당과는 입장이 배치된다. 한편 정의당 지지자의 성향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성향과 유사하다. 자신의 지지 정당인 정의당과 현안에 대한 입장이 일치하는 반면, 보수계 정당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과는 현안에 대한 입장이 사뭇 다르다.

2. 정책선거 추진 방향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선거 민주주의의 질 향상에 필수적인 정책 선거 추진 방향을 제시해 보자. 민주화 이후 선관위를 비롯해 정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이 줄기차게 노력한 결과, 한국의 선거 민주주의는 비교적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다. 그리하여 영국의 이코노미스트(EIU) 잡지가 매년 각국의 민주주의를 평가하는 항목에서 한국은 선거 민주주의 항목에서 항상 최고 점수를 얻었다. 한편 동남아 국가의 야당 정치인이나 정치학자, 시민단체 인사들은 한국의 선관위가 어떻게 정치적 중립을 확립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동남아의 권위주의 정부에서는 야당이나 시민단체

가 투개표 부정에 관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도 선관위가 집권당의 편에 서서 “부정 없음”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선거민주주의가 완벽하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후보와 정당 간의 정책 경쟁이 실종되어 유권자들이 정책이나 공약을 기준으로 후보나 정당을 선택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예컨대 작년 총선에서 이러한 고질적인 병폐가 그대로 드러났는데, 각 정당과 후보들은 정책 경쟁 대신 주로 프레임이나 이미지 경쟁, 네거티브 캠페인에 의존하였다.³⁾ 그리하여 여당의 “야당 심판론”과 야당의 “정권 심판론”이라는 프레임 경쟁에서 전자가 승리하여 180석이라는 거대여당 체제가 등장하였다. 한국 정당의 정책 빈곤이라는 구조적 요인 때문에 지난 총선에서도 정책 대결이 실종되었다. 그 결과 선거과정에서 정부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구체적인 선호가 드러나지 않았다. 따라서 유권자의 의사를 국정운영에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고, 유권자에 대한 정부의 반응성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특히 다음 선거에서 정치적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에 민주적 통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연구 결과는 향후 정책선거 추진 방향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특히 한국 정치가 경험하고 있는 당파적 양극화(partisan polarization)와 정책선거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당파적 양극화를 추동하는 유권자 집단이 다른 아닌 정치적 관여도가 높은 유권자들이라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이 정당일체감을 사회적 정체성의 일부로 강하게 받아들이는 정치적 관여도가 높은 유권자들일수록 정치와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높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이들이 현재 한국 정치의 당파적 양극화를 강화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앞으로 당파적 양극화를 완화하고 정책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정치적 관여도가 낮은 유권자들을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당파적 정체성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유권자들이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수준 높은 정책토론과 정책선거가 가능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정책선거를 위한 노력은 단순히 규범적으로 정책선거를 강조하는 것에 그쳐서는 효과를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전반적으로 투표율과 참여율을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3) 김용호, “2020년 총선 결과의 정치적 의미와 총선에 나타난 주요 문제점 분석,” 한국정당학회 춘계학술대회, 라운드테이블, 2020년 5월 22일, 발표 논문.

이제 체계적으로 정책선거 추진 방향을 논의해 보자. 먼저 정책선거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책선거의 진정한 의미를 공유할 때, 정책선거를 방해하는 요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또 올바른 정책선거 추진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공급자(후보/정당) 측면과 선거에서 후보와 정당을 선택하는 수요자(유권자) 측면으로 나누어 정책선거를 생각해 보자. 공급자 측면에서 보면 정책선거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자신들이 평소 활동과 업적을 바탕으로 앞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비전, 자신의 정견과 정책을 중심으로 상대 후보자와 경쟁하는 형태의 선거를 의미한다. 특히 정당이나 후보자가 승리하였을 때 펼쳐나갈 정책 구상을 유권자들에게 제시하고, 경쟁하는 후보나 정당의 것과 비교하여 자신들이 제시한 국가나 지자체 운영 정책이 경쟁자들보다 우수하고 실현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설득하는 방식의 포지티브(positive) 선거운동이다. 반면 표를 얻기 위해 학연/지연/혈연 등의 1차적인 연고를 이용한 선거, 그리고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흑색선전 등의 네거티브 선거운동 방식은 정책선거에 포함될 수 없다. 한편 수요자 측면에서 정책 선거란 유권자들이 후보자나 정당이 제시한 이념과 이에 따른 정책을 바탕으로 경쟁 후보/정당간의 정책적 차별성을 기준으로 자신이 지지할 후보나 정당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선거를 통해 유권자들은 후보나 정당의 정책을 기준으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치적 선택을 하는 것이므로 감정적인 판단을 배제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공급자 측면-수요자 측면의 정책선거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정책선거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이다. 예컨대 유권자들이 정책이 아닌 다른 기준에 따라 투표하는 경우 후보나 정당은 정책을 제공해서는 당선될 수 없기 때문에 정책선거 전략을 구사할 인센티브가 없어진다. 구체적으로 유권자들이 후보의 정책 대신 자신의 경조사를 챙겨준 후보에게 투표하는 경향이 높은 경우 후보는 정책 개발 대신 경조사 챙기기에 바쁠 것이다. 또 유권자가 정책을 기준으로 투표를 하고 싶지만 후보나 정당이 제공하는 정책을 알기 힘들거나 정책이 부실하거나, 서로 정책을 베끼는 바람에 차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정책 투표가 이루어지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정책선거를 실현하려면 공급자-수요자를 모두 견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4가지 정책 선거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후보와 정당이 올바른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지금까지 후보와 정당이 주먹구구식 정책을 발표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빈 공약을 발표하거나, 다른 후보나 정당의 정책을 베끼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정책의 우선순위 없이 나열만 하거나, 임기 내에 정책 실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법과 예산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공약을 제시하는 경향이 많았다. 특히 대선의 경우, 후보의 사조직에 불과한 캠프에서 정책을 만든 후, 소속 정당과 협의, 검증, 합의도 없이 대선후보의 공약이 되고 당선 후에는 이런 공약을 국가정책으로 채택됨으로써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각 정당은 대통령 퇴임후 캠프에서 만든 정책을 중시하지 않게 되어 정책의 연속성이 실종된다. 4대강 사업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런 현상은 정당의 정책 개발 기능이 부실하여 대선후보 캠프가 정책 개발을 대행함으로써 빚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정당이 패거리 정당에서 벗어나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대선후보 캠프정치의 폐단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 특히 현역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하지 않고 대선후보 캠프에서 공식 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현역의원이 사조직인 대선후보 캠프에서 공식적으로 활동함으로써 정당과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둘째, 후보나 정당의 정책이 유권자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되고, 또 유권자가 후보/정당의 정책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평가하여 선택의 최종 판단을 쉽게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선관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이 후보/정당의 정책을 비교 평가할 기회를 많이 마련하려고 노력했으나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 그리고 선거운동기간에 후보/정당간의 TV 토론을 법제화하여 주요 정책들이 공론화되고 사회적으로 쟁점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특히 선관위는 후보의 공약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권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유권자들이 여전히 후보/정당의 정책 정보를 쉽게 얻기 어렵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후보/정당의 “동네 모임(township meeting)”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와 정당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유권자들이 후보나 정당 지도자를 직접 만나 자신이 관심있는 정책을 질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수록 정책선거가 가능해 질 것이다.

셋째, 유권자들이 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정책을 기준으로 후보나

정당에게 투표하는 것에 익숙해질 수 있어야 한다. 그 동안 한국 유권자들은 지역주의 투표가 성행하였다. 지역주의 투표는 정책선거를 방해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왜냐하면 호남과 영남 지역 선거에서는 거의 언제나 호남과 영남 정당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지역 후보들은 정책 개발이나 정책 경쟁을 소홀히 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병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주의를 완화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 한국 정치에서 지역과 이념 균열이 중첩되는 바람에 지역-이념 대립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장기적으로 민주 시민교육을 강화하여 건전하고 합리적인 유권자를 육성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점은 선거가 끝나고 나서 승리한 후보나 정당은 선거기간에 약속한 정책을 성실히 수행하여 유권자들의 신뢰를 얻어야 정책선거가 가능해진다. 그 동안 후보나 정당이 표를 얻기 위해 실현 가능성이 없는 빈 공약을 남발함으로써 유권자의 정치 불신이 컸다. 이런 상황에서는 유권자가 정책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앞으로 후보/정당이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제시하고, 당선 후에 이를 실현할 때, 유권자의 정치 불신이 줄어들고, 나아가 정책선거의 기반이 튼튼해질 수 있다.

참고문헌

- 가상준. 2016. “정책영역별로 본 국회 양극화.” 『OUGHTOPIA』 31-1. 327-354.
- 강우창 · 구본상 · 이재묵 · 정진웅. 2020. “제21대 국회의원 이념성향과 정책 태도,” 『의정연구』 26권 3호, 37-83
- 강원택. 2003. 『한국의 선거정치: 이념, 지역, 세대와 미디어』 서울: 푸른길.
- 강원택. 2010. 『한국 선거정치의 변화와 지속: 이념, 이슈, 캠페인과 투표참여』 서울: 나남.
- 강원택. 2011. “한국에서 정치 균열 구조의 역사적 기원: 립셋-록칸 모델의 적용.” 『한국과 국제정치』 27권 3호, 99-129.
- 강원택. 2012. “제19대 국회의원의 이념 성향과 정책 태도.” 『의정연구』 18-2. 5-38.
- 길정아. 2019. “정부 신뢰, 회고적 투표, 그리고 당파적 편향: 2014년과 2018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18권 3호, 31-69.
- 길정아 · 하상웅. 2019. “당파적 편향에 따른 책임 귀속: 여야간 갈등인식과 정당 호감도를 중심으로.” 『의정연구』 25권 1호, 46-78.
- 김성연. 2015. “정치적 태도와 인식의 양극화, 당파적 편향, 그리고 민주주의: 2012년 대통령선거 패널 데이터 분석.” 『민주주의와 인권』 15권 3호, 459-491.
- 김성연 · 김형국 · 이상신. 2012. “한국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정책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최근 설문조사자료에서 나타난 경험적 증거.” 『한국정치연구』 21권 3호, 99-126.
- 김영태. 2005. “대통령지지와 정당지지: 노무현 정부시기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4권 2호.
- 박윤희 · 김민수 · 박원호 · 강신구 · 구본상. 2016.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자 및 후보자의 이념성향과 정책태도.” 『의정연구』 22권 3호, 117-157.
- 박찬욱. 1993. “제14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의 정당지지 분석.” 이남영 편. 『한국의 선거 I』. 서울: 나남.

- 송진미·박원호. 2016. “이슈경쟁과 합의이슈모델: 2014년 서울시장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15권 1호.
- 윤성이. 2006. “한국사회 이념갈등의 실체와 변화.” 『국가전략』 12권 4호, 163-182.
- 이갑윤·이현우. 2008. “이념투표의 영향력 분석: 이념의 구성, 측정 그리고 의미.” 『현대정치연구』 1권 1호.
- 이내영. 2011. “한국사회 이념갈등의 원인: 국민들의 양극화인가, 정치엘리트들의 양극화인가?” 『한국정당학회보』 10권 2호, 251-285.
- 이내영·정한울. 2007. “이슈와 한국 정당지지의 변동.” 『한국정치학회보』 41집 1호.
- 이내영·허석재. 2010. “합리적 유권자인가, 합리화하는 유권자인가?: 17대 대선에 나타난 유권자의 이념과 후보선택.” 『한국정치학회보』 44집 2호.
- 이현출. 2001. “무당파층의 투표행태: 16대 총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4집 4호.
- 장기영·박지영. 2018. “한국 정당지지자는 대통령선거 후보자와의 ‘이념거리’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한국 정당지지자의 ‘투사효과’ 비교분석.” 『한국정당학회보』 17권 1호, 77-102.
- 장승진. 2013. “경제민주화와 제18대 대선: 쟁점투표(Issue Voting)와 정치지식(Political Knowledge).” 『한국정당학회보』 12권 1호, 87-112.
- 장승진·서정규. 2019. “당파적 양극화의 이원적 구조: 정치적 정체성, 정책 선호, 그리고 정치적 세련도.” 『한국정당학회보』 18권 3호, 5-29.
- 장승진·장한일. 2020. “당파적 양극화의 비정치적 효과.” 『한국정치학회보』 54집 5호, 153-175.
- 조성대·한귀영. 2010. “대통령 국정지지, 정당지지, 그리고 경제전망의 동태적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44집 2호.
- 조중빈. 1993. “유권자의 여야성향과 투표행태.” 이남영 편. 『한국의 선거 I』. 서울: 나남.
- 정동준. 2016. “2016년 국회의원선거 이후 시민들의 통일의식 변화: 이념적 양극화인가, 당파적 편향인가?” 『한국정치학회보』 50집 5호, 131-161.
- 정동준. 2018. “2018년 지방선거 이후 유권자들의 정치 양극화: 당파적 배

열과 부정적 당파성을 중심으로.” 『OUGHTOPIA』 33권 3호, 143-180.

최준영 · 조진만. 2005. “지역균열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경험적 고찰: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나타난 이념과 세대 균열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9집 3호.

하상응 · 길정아. 2020. “유권자의 정치 관심은 언제나 바람직한가?: 정부 신뢰의 이념 편향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54집 2호, 31-57.

Abramowitz, Alan I. 2010. *The Disappearing Center: Engaged Citizens, Polarization and American Democrac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Abramowitz, Alan I., and Kyle L. Saunders. 2006. “Exploring the Bases of Partisanship in the American Electorate: Social Identity vs. Ideology.”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59(1).

Abramowitz, Alan I., and Kyle L. Saunders. 2008. “Is polarization a myth?” *The Journal of Politics* 70(2): 542-555.

Achen, Christopher. 1992. “Social Psychology, Demographic variables, and Linear Regression: Breaking the Iron Triangle in Voting Research.” *Political Behavior* 14(3).

Bafumi, Joseph, and Robert Y. Shapiro. 2009. “A New Partisan Voter.” *Journal of Politics* 71(1).

Barnes, Samuel H., M. Kent Jennings, Ronald Inglehart, and Barbara Farah. 1988. “Party Identification and Party Closeness in Comparative Perspective.” *Political Behavior* 10(3).

Berelson, Bernard R., Paul F. Lazarsfeld, and William N. McPhee. 1954. *Voting: A Study of Opinion Formation in a Presidential Campaig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Brody, Richard A., and Benjamin I. Page. 1972. “The Assessment of Policy Voting.”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6(2): 450-458.

Campbell, Angus, Philips E. Converse, Warren E. Miller, and Donald E. Stokes. 1960. *The American Voter*.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Campbell, Angus, Gerald Gurin, and Warren E. Miller. 1954. *The Voter Decides*. Evanston, IL: Row, Peterson.

Conover, Pamela Johnston, and Stanley Feldman. 1981. “The

Origins and Meaning of Liberal/Conservative Self-Identification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5(4)..

Converse, Philip E. 1964. “The Nature of Belief Systems in Mass Publics,” in David E. Apter (ed.) *Ideology and Discontent*. New York: Free Press.

Ellis, Christopher, and James A. Stimson. 2012. *Ideology in America*. Cambridge University Press.

Feldman, Stanley, and Christopher Johnston. 2014. “Understanding the determinants of political ideology: Implications of structural complexity.” *Political Psychology* 35(3): 337-358.

Fiorina, Morris P. 1980. “The decline of collective responsibility in American politics.” *Daedalus*: 25-45.

Fiorina, Morris P. 1981. *Retrospective Voting in American National Election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Fiorina, Morris P., Samuel A. Abrams, and Jeremy C. Pope. 2008. “Polarization in the American public: Misconceptions and misreadings.” *The Journal of Politics* 70(2): 556-560.

Fiorina, Morris P. 2017. *Unstable Majorities: Polarization, Party Sorting, and Political Stalemate*. Stanford: Hoover Press.

Franklin, Charles H., and John E. Jackson. 1983. “The Dynamics of Party Identifica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7(4).

Gerber, Alan S., and Donald P. Green. 1998. “Rational Learning and Partisan Attitud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2(3).

Green, Donald, Bradley Palmquist, and Eric Schickler. 2002. *Partisan Hearts and Minds: Political Parties and the Social Identities of Voter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Greene, Steven. 1999. “Understanding Party Identification: A Social Identity Approach.” *Political Psychology* 20(2).

Huddy, Leonie, Alexa Bankert, and Caitlin Davies. 2018. “Expressive Versus Instrumental Partisanship in Multiparty European Systems.” *Political Psychology* 39(s1).

Huddy, Leonie, Lilliana Mason, and Lene Aarøe. 2015. “Expressive Partisanship: Campaign Involvement, Political Emotion, and Partisan

Identit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9(1).

Iyengar, Shanto, et al. 2019. "The origins and consequences of affective polarization in the United State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22: 129-146.

Jennings, M. Kent, and Richard G. Niemi. 1981. *Generations and Politic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Johnston, 2006. "Party Identification: Unmoved Mover or Sum of Preference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9.

Judd, Charles M., David A. Kenny, and Jon A. Krosnick. 1983. "Judging the Positions of Political Candidates: Models of Assimilation and Contra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5): 952-963.

Katz, Richard S. 1979. "The Dimensionality of Party Identification: Cross-National Perspectives." *Comparative Politics* 11(2).

Lazarsfeld, Paul F., Bernard R. Berelson, and Helen Gaudet. 1944. *The People's Choice: How the Voter Makes Up His Mind in a Presidential Campaig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LeDuc, Lawrence. 1981. "The Dynamic Properties of Party Identification: A Four-Nation Comparison."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9(3).

Levendusky, Matthew. 2009. *The partisan sor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Markus, Gregory B., and Philip E. Converse. 1979. "A Dynamic Simultaneous Equation Model of Electoral Choi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3(1)

Mason, Lilliana. 2015. "'I disrespectfully agree': The differential effects of partisan sorting on social and issue polariza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9(1): 128-145.

Miller, Warren E. 1991. "Party Identification, Realignment, and Party Voting: Back to Basic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5(2).

Miller, Warren E., and J. Merrill Shanks. 1996. *The New American Vote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Nie, Norman H., Sidney Verba, and John R. Petrocik. 1976. *The*

Changing American Vote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Niemi, Richard G., and M. Kent Jennings. 1991. "Issues and Inheritance in the Formation of Party Identifica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5, No. 4.

Page, Benjamin I., and Calvin C. Jones. 1979. "Reciprocal Effects of Policy Preferences, Party Loyalties, and the Vot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3(4).

Richardson, Bradley M. 1991. "European Party Loyalties Revisited."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5(3).

Theriault, Sean M. 2008. *Party polarization in congres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Webster, Steven W., and Alan I. Abramowitz. 2017. "The ideological foundations of affective polarization in the US electorate." *American Politics Research* 45(4): 621-647.

Weisberg, Herbert. 1999. "Political Partisanship," in John Robinson, Phillip Shaver, and Lawrence Wrightsman (eds.) *Measures of Political Attitudes*. New York: Academic Press.